

발간등록번호

51-6110000-002038-01



I · SEOU · U  
너와 나의 서울

# 공감하는 서울시민, 함께하는 이웃살이

민주주의 학습 안내서



# 공감하는 서울시민, 함께하는 이웃살이

민주주의 학습 안내서



# 차례

프롤로그	4
제1장 시민학습에 관하여	32
제2장 시민학습의 이모저모	58
제3장 민주주의 실천 기술	86
결론	130
부록	
민주주의를 촉진하는 기술(민주적 의사소통 기법)	136



# 프로로그



# 서울 시민 여러분, 요즘 잘 살고 있나요?

# 누군가를 돌아볼 여유가 있나요?

# 일상에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신뢰하는  
이웃들이 있나요?

# 때론 낯선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은 적이  
있나요? 아니면 여러분이 어려움에 처한  
누군가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손을 내민  
경험이 있나요?

# 서울에서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 민주시민, 공존의 시민사회를 만드는 능동적 주체

바로 이런 다양한 질문들 속에 ‘민주시민’의 다양한 얼굴이 있습니다. 시민 학습에 대해서 특정한 이론과 공식을 배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상 생활 속에서 함께 공존하면서,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크고 작은 실천을 하는 것이 민주시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일상생활 속에서 서울시민의 잠재적 민주시민성을 향상시키고 더 나은 공존의 삶을 만들고 민주성과 다양성이 존중되고 어우러지는 서울시의 민주주의를 생각하는 가이드북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시민이 ‘시민 학습의 주체’이며 ‘민주주의가 녹아 있는 시민사회를 만드는 주인’이라는 점입니다.

## 현대 사회와 시민학습: 왜 시민학습인가

현대 사회를 연구하는 여러 학자들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를 ‘불확실성의 시대’, ‘위기의 시대’, ‘유동성과 불안정성의 시대’라고 정의합니다. 산업시대 이후 고도의 경제 성장을 이룬 유럽과 북미의 선진국들은 경제 위기와 실업 및 저성장 시대를 거치고 있고, 옳고 그름에 대한 절대적인 해석이 흔들리고, 윤리적 가

치 규범과 사상 체계도 하나의 정답으로 정리되지 못하는 복잡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많은 나라들은 이러한 불확실성이 커지는 현대 사회에서 지속가능한 발전 [sustainable development](#)이 대안적 삶의 모습으로 제시됩니다. 성과 도출과 경쟁 그리고 소비 기반의 물질 지향적인 가치와 인식을 생태적으로 전환하면서 지속가능한 삶의 기반을 확충하고 사회 공공성을 확대하는 시민사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를 완수하기 위해서 전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고, 바로 여기에 시민 학습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즉 시민학습은 다양성을 존중하고 공공의 선을 추구하기 위해서 연대하고, 형평성과 사회정의를 추구하면서 공동체의 민주시민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시민 참여형 교육입니다.

## 점진적으로 성장하는 시민, 그리고 공존하는 민주사회

우리는 시민으로 태어나지 않고 시민으로 성장해나갑니다. 세계 어느 나라 누구도 아무 생각 없이, 노력 없이, 배움 없이, 직간접적인 참여 행위 없이, 저절로 민주시민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어떤 경우는 민주주의를 촉진하는 기술이 필요하고, 실천하는 방법이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서로 다른 사람들이 눈높이를 맞추고 대화하고 소통

하는 것은 약간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 속에서 움츠러들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하고, 긍정하지 않은 사회 문제에 대해서 문제의식 없이 그대로 수긍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민들이 사회의 주역으로서 비판적인 사고를 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사회적 신뢰와 공존의 힘을 믿고 우리는 더 나은 민주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함께 조금씩 느리더라도 점진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작은 단위에서 큰 단위까지, 서로 이질적인 상황에서 친밀한 상황까지, 갈등을 직면하고, 문제의식을 발견하고, 해소하고 통합과 성취로 나아가기까지 단계를 고민해야 합니다.

이 책은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사회의 현실에서 민주주의가 왜 중요한지 인식하고, 시민학습을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하면서 시민으로서 무엇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를 생각해보는 책입니다.

민주주의를 배우는 것은,  
민주시민이 된다는 것은 다른 교육과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 ❖ 글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만나고 행동하면서 배워요.
- ❖ 배우는 사람과 가르치는 사람이 구분되지 않고 함께 배워요.
- ❖ 시민학습을 통해서 '나', 우리, 지역, 서울이라는 큰 사회가 조금씩 변화해요.



## 독일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의 인권상을 받은 촛불혁명

독일의 공익 정치재단이자, 시민학습의 중요한 기관인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은 2017년 촛불집회에 참여한 ‘대한민국 국민’을 2017 에버트 인권상 수상자로 선정했습니다. 인권상이 제정된 1994년 이후, 특정 단체나 개인이 아닌 한 국가의 국민이 수상자로 선정된 건 처음이라는 사실이 흥미롭지요?

국정농단을 계기로 폭발한 촛불 시위는 2016년을 기점으로 한국 사회에서 민주주의의 거대한 흐름이 되었고, 시민이 주체라는 자부심과 책무성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시민들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자신의 주머니를 털어서 광화문 광장으로 주말마다 휴식을 포기하고 참여했고, 낯선 시민들과 삼삼오오 자리를 잡아서 공동의 목소리를 내고 연대하면서 참여하는 시민으로 거듭났습니



다. 민주주의란 말이 더없이 가까이 다가온 것입니다. 이렇듯 적극적인 시민참여를 우리의 일상 속에서 실현하는 것이 민주시민성을 보여주는 핵심 사례입니다.

그러나 시급하고 급격한 정치적 현안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크고 작은 장면에서 민주시민으로서 사고하고 행동하고 고민하면서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드는 연습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이 책은 그 방향에 대한 작은 가이드라인입니다.

# 자가 진단 질문지



# 민주시민성이란 무엇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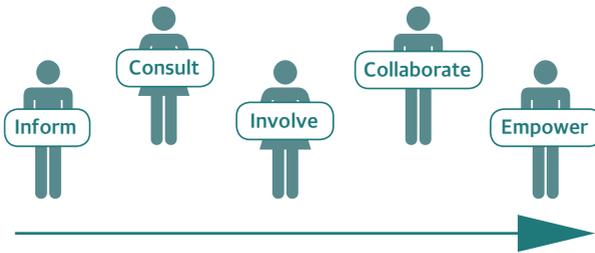
# 서울과 민주주의, 그리고 시민은  
어떤 관계를 가지나요?

# 더 나은 삶을 만들기 위해서 시민은  
무엇을 배우고, 만들어가야 할까요?

민주시민성 *democratic citizenship*은 정치권, 사회권, 문화권이 시민주체에게 민주적으로 확장되는 것을 말하며, 시민학습은 민주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시민들의 지식, 기술, 태도, 인식을 재구성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우리 개인 시민들이 이 권리를 어떻게 생활 속에서 구현하는가가 민주주의를 만드는 척도입니다.

서울이라는 공간 속에서 시민과 공동체, 그리고 이를 둘러싸고 있는 외피로서의 ‘민주주의’에 대한 시각적 그림 그리기

## RIGHTS & DEMOCRACY



어떤 행위가 민주시민성을 이끄는 것인가? 누가 민주시민인가?

- ¶ 정치사회문화경제 제반에 대한 정보, 쟁점을 인지
- ¶ 나와 지역사회를 둘러싼 각종 정치사회경제 이슈에 대한 자각 및 상의
- ¶ 수동적으로 머물지 않고 능동적이고 적극적 시민으로 참여
- ¶ 공공성을 위한 협력과 연대 행위 동참
- ¶ 애드보커시와 권한위임 및 강화(특히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

## 한국사회의 정치생태계 변화와 시민학습의 특성

¶ 한국전쟁과 독재로 이어지는 역사적 과정 속에서 민주화를 경험하고, 1970년대 이후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루고, 1990년대 다시 세계화 물결을 통해서 사회경제적 체질을 변화시키는 역동적 과정을 겪게 되었다. 신자유주의를 기조로 한 자본주의적 경제체제가 굳건히 자리 잡게 되면서 경제 발전의 문화적 격차와 괴리로 인해서 사회적 신뢰 자본이 약화되고, 공동체 연대의식이 물신주의에 밀려 약화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2016년 평화적인 촛불 시위는 최고의 정치권력을 시민의 비판적 의식과 연대적 참여 행위를 통해서 바꾸는 혁신을 이끌게 되면서 민주시민성은 현재 한국의 시민사회의 특수성을 보여주는 핵심적인 단어가 되었다. 특히 촛불 혁명은 민주시민성 불씨를 시민단체 주도나 특정 세력 주도가 아니라, 일상을 살아가는 시민들이 점화시켰다는 점에서, 일상생활에 녹아든 시민들의 참여라는 점에서, 세계적으로도 주목을 끈다. 현재적 관점에서 볼 때 OECD 회원국 가운데 어떤 선진국도 한국의 시민들만큼 대통령을 둘러싼 정치 비위에 비판적 시각으로 참여하여 평화적 시위를 통해서 변혁시킨 경우는 전무하다.

¶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흐름:** 1919년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 1960년 4·19혁명 - 1961년 5·16 군사정변 - 1980년 5·18민주화운동 - 1987년 6월 민주항쟁 - 2016년 촛불혁명.

## 제로로서의 민주주의란?

- ☑ 대의민주주의에서의 문제점은 대표자와 주권자와의 심각한 의사불일치, 대표자의 권력 독점과 사유화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직접민주주의 제도들이 도입되는 것이다.
- ☑ **참여제도:** 국민투표, 지방자치제, 주민소환, 주민발안, 주민투표, 정보공개청구, 주민감사청구, 주민소송, 민원, 공청회, 여론조사, 자문위원회, 주민참여 예산, 협치, 직접행동 등.

## 원리로서의 민주주의란?

- ☑ **민주:** 평범한 사람들이 내 삶의 주인이자 사회적 삶의 주인이라는 인식, 즉 모든 시민이 자신의 의지에 따라 삶을 가꾸고, 공동의 삶 역시 집단으로서 시민들이 함께 운영하는 것. 이러한 자유를 향유하기 위해 노력하고 능력을 키우는 것이 시민학습이다.
- ☑ **공화:** 함께 더불어 사는 것, 의견을 모으고 공동의 가치를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나와 타인의 이해관계를 균형 있게 바라보고, 개인의 문제를 사회 전체의 문제와 관련지어 생각하는 힘을 키우기 위해서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가운데 공통점을 찾아내고 다른 점을 수렴하여 공동의 가치를 형성해야 한다. 이렇게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으로 기대고 돕는 능력, 즉 관용과

연대의 정신이 공유되어야 한다.

☑ **존엄:** 인간은 목적 그 자체이며, 수단으로 취급되어서는 안 되는 ‘비교할 수 없는 무조건적인 가치’를 가진다. 매일 매일 소중하게 존중받는 것을 경험하는 것으로 일상 속에서 존엄의 가치를 자각하게 된다. 자신이 지닌 정체성 중 하나를 존중받지 못할 때, 사상이나 취향으로 부당한 차별을 받을 때 모멸감을 느낄 수 있다.

### 실천으로서의 민주주의란?

☑ “모든 시민은 자신들의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갖는다”는 말처럼 국가 단위의 정치 수준과 일상생활 단위의 정치 수준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서로 영향을 미친다.

☑ 일상생활 단위의 정치 수준이 일상의 민주주의라 할 수 있다. 즉 시민이 일상적으로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거나, 상충되는 신념이나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이 일상의 민주주의(생활속민주주의)이다.

☑ **‘시민에 의한’ 실천들:** 촛불시위, 태안 기름 사태 등 재난재해를 복구하기 위한 전 국민적인 자원봉사뿐만이 아니라 동료 이웃돕기, 사회문제를 감시하고 바로 잡기 위한 노력, 그리고 권력과 금력에서 벗어나 인간적이고 의미 있는 삶의 양식을 만들어가는 다양한 실천이 이루어지고 있다. 시민학습은 지식의 축적만이 아닌,

교육을 통해 시민들의 인식과 행동의 변화를 지향하므로 실천은 매우 중요한 주제이다.

☑ 이러한 실천들을 직접적으로 억압하는 장치도 제거해야 하지만, 이를 억압하는 사회적 조건과 문화도 분별하여 넘어설 수 있는 방법들을 함께 찾아야한다. 또한 누가 구조적으로, 암묵적으로 우리사회에서 억압받는지를 살피고, 이들이 민주시민으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러 방법과 채널을 열어놓아야 한다



# 서울시민의 목소리를 들어볼까요?



## 천만 서울시민의 다양한 목소리의 조각들

### : 나에게 시민학습이란?

- 제 생각엔, 서로 안전하고 행복한 교육이 시민학습이 아닐까 해요. 상호 신뢰가 높아지는 교육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30대 초반 여성, 회사원)
  
- 머리로는 시민학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내가 안정될 때 타인을 돌아볼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런 여유를 가지고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교육이 되었으면 합니다. (30대 중반 여성, 유치원교사)
  
- 재미있고 유익한 교육이면 좋겠어요. 작은 돈을 들여서라도 내가 살아가는 서울시에 대해서 조금 더 알 수 있고, 생활에 유익한 교육이 되어야 나처럼 나이든 사람도 참여한다고 생각해요. 이런 교육을 통해서 우리 세금이 어디에 쓰이는지, 내가 시민으로서 어디에 더 참여할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60대 후반 여성, 베이비시터)
  
- 제주에서 대학 진학 때문에 서울로 왔어요. 서울살이 6년 차, 아직도 나에게 서울은 섞이지 않는 공간이에요. 뭐랄까 약간 붕 떠 있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도 저는 계속 서울

에 살고 싶어요. 서울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 어울리며, 소속감을 가지고 잘 살아갈 수 있는 교육이 시민학습이 아닐까요? (20대 중반 남성, 대학생)

**사회가 점점 각박해지고 개인이 가진 어려움과 상실도 큰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타인이 힘들 때, 어려운 이웃의 소식을 뉴스로 접할 때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나요?**

☞ 음, 정말 안 됐다... 그런데 나는 잘살아야겠다는 생각이요. 뼈근 잘못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나는 저렇게 안 되도록 노력해야겠다고 생각하죠. (20대 중반 남성, 대학생)

☞ 뭔가 해결하고 싶어요. 어려운 이웃 소식이나, 사회적 불신 뉴스를 보면 내가 사는 서울이 왜 이렇게? 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30대 중반 여성, 프리랜서)

☞ 낮에 일하러 종로 일대를 다닐 때 어려운 노숙자, 노인들을 자주 보게 돼요. 너무 많아서 무관심하게 넘어가는데 아니라, 그분들의 특징이나 모습이나 활동하시는 패턴이나 알게 모르게 신경을 쓰면서 눈길을 보내게 돼요. 서울시나 구청에서 제도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있지만 근

본적인 문제 해결은 안 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쓰여요.  
(50대 중반 남성, 회사원)

☞ 도와주고 싶죠. 아무래도 여기저기 다니면서 많이 보고 뉴스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나오니까요. 그런데 딱히 방법이 있을지... 제가 살면서 느낀 건 이래요. 나를 지탱해주는 공동체가 있어서 버틴다는 점이에요. 이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60대 초반 여성, 주부)

## 시민 인터뷰를 통해서 함께 생각하기

이처럼 시민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시민학습이 서울시민들에게는 스스로 안전을 느끼고 사회적 신뢰를 가지게 하는 교육, 누군가를 도와주는 교육, 참여하는 교육, 주변을 돌아보는 교육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인터뷰에 참여한 평범한 서울시민들은 우리 사회의 소수자, 취약계층 이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으며, 문제해결을 위한 공동의 제도적, 문화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목소리를 모았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것은, 시민들은 각자의 바쁜 일상 속에서 시민학습 프로그램에 등록하고 강의실을 찾아가는 ‘노력’과 ‘결심’이 마음만큼 쉽지 않을 수 있으니, 다양한 참여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민주시민 학습 참여 경험을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민주시민으로서 모든 사회 현안은 아니더라도, 관심있는 정치 사회경제적 이슈를 비판적 시각으로 인식하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판단하고 공동으로 힘을 모으고, 다른 동료 시민들로부터 배우고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학습을 통한 인식 확장은 일어나지만, 당장 변화로 이어지는 것은 개인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와 태도의 변화를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구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우리의 민주시민성을 돌아보고 잠재적으로 테스트하게 하는 뉴스들

## 강북구로 가자, 마을공동체 배우러

'신사유람단' 운영... 북카페 등 주민이 만든 공간 탐방

수정 : 2014-07-22 01:07

+ - ☰

“전업주부 7명이 힘을 모아 책카페를 열었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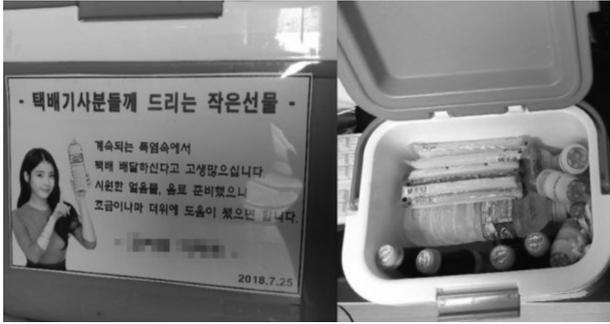
김진숙(43·여) 열린사회북부시민회 대표는 21일 이렇게 말하며 힘박웃음을 지었다. 주부들이 모여 그림책 공부를 하는 작은 모임이던 '오세암'에 책카페를 제안한 주인공이다. 강북구의 지원으로 2012년 12월 강북 청소년문화정보센터에 100㎡(30평 남짓)의 공간을 마련해 '마을 북카페 책읽는 마을'을 열었다. 이젠 2000여권의 책을 갖춘 북카페로 동네 사랑방 역할을 톡톡히 한다. 함께 반찬을 만들어 집에 가져가는 반찬데이, 주부들의 독서 토론회인 책수다, 학부모 강좌, 청소년들이 동네 아이들과 놀아 주는 놀이터 잔치 등을 하고 있다. 김씨는 “자원봉사자들이 차비도 못 받지만 동네 사람을 이어 주는 역할을 한다는 데 자부심을 느낀다”고 전했다.

- 책 읽는 행위 자체는 지극히 개인적인 활동이라 할 수 있지만, 마을공동체 사례에서는 지역 주민들이 북카페를 만들어, 공동의 공간에서 책에 대해서 소통하고 나아가 학부모들의 인식 전환을 위한 강좌를 만들고, 청소년과 아이들이 어울릴 수 있는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한 사례라는 점에서 주체적 시민 참여 [active civic participation](#)가 나타난 사례이다.

## 폭염 속 택배기사 위해 '작은 선물' 준비한 아파트 주민 '훈훈'

윤우영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18-07-30 13:51 수정 2018-07-30 14:32

🔊 🖨️ 📄 🏠



¶ 타인과 나의 공존을 위해서, 보다 공정한 사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꼭 거창하고 영웅적인 의인이 되는 일만은 아닐 것이다. 2018년 7월에 충남의 한 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민이 폭염 속에 근무하는 택배기사를 위해 얼음물과 간식들을 제공한 사연이 보도되었다. "이 무더위에 일하느라 힘들었는데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택배기사의 화답이 전해지는가 하면, 네티즌들은 "따뜻하다"는 응원 댓글을 달았다. 이 사례를 볼 때 깨어 있는 민주시민이 되는 것은, 매일 매일의 일상 속에서 타인에 대한 배려, 공감적 감수성을 통해서 발현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 지금 우리사회의 신뢰와 소통, 사회 참여 수준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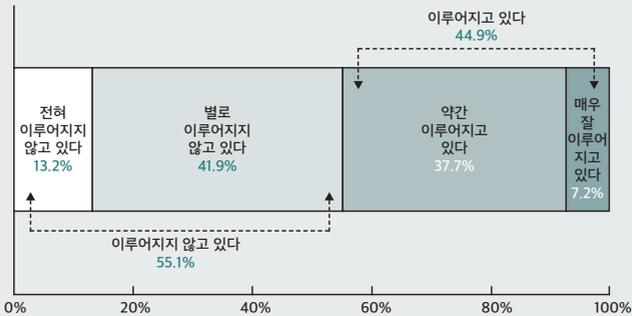
 연구 결과를 한 번 볼까요?

## - 이웃들과 얼마나 소통하나요?

2015년에 실시된 사회통합실태조사를 보면, ‘지역사회에서 넓은 의미의 이웃 간 소통이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절반 이상인 55.1%가 소통이 별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전혀 소통과 상호작용이 없다고 응답했다.

### 한국 사회 집단 간 소통 수준 : 이웃 간의 경우

4점 평균  
2014년 : 2.4점  
2015년 : 2.4점



출처: 2015 사회통합실태조사(2015: 98)

'믿을 사람이 없다'(OECD 35개국 중 23위), '사법시스템도 못 믿겠다'(34위), '의지할 사람 없다'(34위), '사회규범이 잘 작동하지 않는다'(17위), 우리나라의 신뢰, 규범, 네트워크 등 3대 사회적 자본의 현주소가 국제사회에서 바닥 수준이다.

특히 신뢰도의 경우, 경제개발협력기구(OECD)가 35개 회원국의 사회신뢰도 조사 결과, 한국은 하위권이다. 특히 사법시스템에 대한 신뢰도 역시 한국은 신뢰도 27%로 34개국 중 33위를 차지해 최하위권이었다.

'다른 사람들을 신뢰할 수 있는가'라는 물음에 한국은 26.6%만이 그렇다고 응답해 전체에서 23위를 차지했다. 덴마크가 74.9%로 사회신뢰도 순위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노르웨이 72.9%(2위), 네덜란드 67.4%(3위) 순이었다. 일본은 38.8%(13위), 미국은 35.1%(17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 - 우리는 얼마나 기부하나요? 세계 속의 한국의 기부 수준

영국의 자선지원재단<sup>CAF</sup>과 미국의 여론 조사 갤럽이 기부와 자원봉사를 세계 기부 지수<sup>World Giving Index, WGI</sup>라는 이름으로 발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기부 참여 지수는 139개 조사 대상국 가운데 62위에 그쳤으며, 34%의 지수를 나타냈다. 조사 방식은 139개국에서 1000명을 인터뷰해서 1년 동안 낯선 이를 도와준 경험, 기부 경험, 자원봉사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산출하여 도출한 것이다.

주목할 점은 세계 기부 지수에서 4년 연속 미얀마(65%)가 139개국 중 1위를 차지한다는 점이며, 그 뒤를 잇는 나라는 인도네시아(60%), 케냐(60%)라는 점이고, 이웃나라 일본은 111위(24%)를 차지했다. 이는 부유한 국가라고 해서 기부 문화가 자동적으로 정착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며, 기

부는 돈이 있어야 한다는 편견을 깨는 결과이다. 물신적으로 누군가에게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일상 생활에서 내가 모르는 낮은 타인들에게, 스쳐가는 동료 시민들에게, 그러나 자기가 속한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베푸는 크고 작은 친절과 배려가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4년 연속 1위를 차지한 미얀마의 경우는 일상 속에 자리 잡은 사찰에서 수도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돕는 시민들의 작고, 빈번하고, 일상적인 행동이 지역사회 전반에 퍼져있는 문화적 맥락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일상 속의 나눔과 사회적 공공선을 추구하는 것이 시민학습의 중요한 내용이자 과정이 된다는 점이다.

### 세계기부지수<sup>WGI</sup> 상위 국가 및 한국 순위

나라	순위	지수(%)
미얀마	1(-)	65
인도네시아	2(7)	60
케냐	3(12)	60
뉴질랜드	4(-)	57
미국	5(2)	56
호주	6(3)	56
캐나다	7(6)	54
아일랜드	8(9)	53
아랍에미리트	9(10)	51
네덜란드	10(13)	51
영국	11(8)	50
시에라리온	12(46)	49
몰타	12(16)	48
라이베리아	14(52)	46
아이슬란드	15(17)	46
태국	16(37)	46
이란	17(45)	45
잠비아	18(63)	45
독일	19(21)	45
노르웨이	20(14)	45
...	...	...
...	...	...
<b>한국</b>	<b>62</b>	<b>34</b>
일본	111	24
중국	138	14
예멘	139	13

## - 모바일, 온라인 세계에서 활발하게 참여하는 국민

우리나라 국민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SNS 활동을 하고, 정치 사회경제 등 각종 뉴스에 대한 댓글을 능동적으로 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맥락에서 2018년 2월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발표에 따르면, 한국이 세계 이동통신 사업자협회(Global System for Mobile communications Association)가 발표하는 글로벌 모바일 참여 지수(Global Mobile Engagement Index)에서 1위를 기록했다고 한다. GMEI는 50개 나라의 만 18세 이상 성인 5만 명(국가당 1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조사로서, 우리나라는 10점 만점에서 6.0점을 기록해 2017년과 마찬가지로 1위를 기록했다. 2위는 카타르, 3위는 핀란드가 뒤를 잇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모바일 활용사례 상위 10건을 살펴보면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 방문’, ‘뉴스 읽기’,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및 사용’ 부문 등에서 가장 활발한 사용 패턴을 보였다. 시민들의 모바일 참여가 매우 높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청와대 국민청원 전성시대’로 불리고 있을 만큼, 일반 시민들의 국민청원 게시판 참여도는 괄목할만큼 높다. 2017년 8월 17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개설한 이래, 6개월여 만에 무려 12만2594건의 청원이 올라왔으며, 하루 평균 681건의 청원이 올라온 셈이라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대통령님, 이 건을 청원합니다.”라는 청원 게시판은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국정철학을 약속대로 구현하고 있지만, 부작용에 대한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국민 청원의 봇물은 그동안 시민들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문제의식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우리사회를 더 합리적으로 바람직하게 바꾸자는 목소리를 비판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민주 시민성이 적극적으로 구현되는 참여행위라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다. 그러나 각종 청원 가운데 감정적이고 개인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경우, 공공성과 사회정의를 담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며, 청와대가 원론적인 답을 제시하는 경우는 근본적인 해결과 변화는 어려울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 국가 정책에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시민사회의 ‘소통 창구’로 국민청원은 순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국민들의 열정적 참여 의식이 합리적인 방향으로, 지속가능한 사회 개혁과 발전을 이끄는 마중물로 기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제1장

## 민주주의 학습에 관하여



## 왜 시민학습일까요?

저절로 시민이 되지는 않습니다. 시민으로 성장하는 것이죠.

2010년 서울에서 열렸던 G20 폐막식장에서, 오바마 당시 미국 대통령은 주최국인 한국기자들에게 마지막 질문 기회를 줬습니다. 공식석상에서 미국 대통령에게 질문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기회였고, 질문할 권한을 우선 한국기자들에게 주었습니다. 몇 분이 지났지만 질문을 위해 손을 든 한국기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결국 중국기자에게 질문권은 넘어갔습니다. 5분 남짓한 이 영상을 보며, ‘왜 우리는 질문하길 꺼려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자리에서도 자신의 역할을 수행할 줄 아는 시민, 그리고 내가 속한 정치사회, 지역사회에 무엇이 문제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 고민하는 시민. 동시에 그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정치가, 또는 지역 주민에게 문제제기와 자신의 의사를 말할 수 있는 시민. 이러한 모습이 우리가 생각하는 시민의 모습이 아닐까요?

질문하는 사회, 지역 주민 스스로가 공동체가 직면한 문제제기와 자신의 의사를 말할 수 있는 사회는 어떤 것일까요? 시민으로서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시민학습의 철학이자 원칙인 민주주의를 헌법에 비추어서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헌법 제1조에 명시된 국가공동체의 정체성인 민주공화국의 의미는 평화, 인권, 민주주의, 양성평등, 지속가능성 등 행복한 삶과 좋은 사회를 실현하는 것이고, 이를 위한 시민사회의 공유가치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공유가치에 관한 지식을 넘어 그것을 내면화하고, 자신의 삶과 사회를 민주적으로 만들어가기 위해 스스로 생각하고 소통하며 공동체를 가꾸어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시민이라 말합니다.

한국 사회 내 절차적, 형식적 민주화의 진전 이후 절제되지 않은 이해관계의 분출, 사회갈등, 공공영역에 대한 경제적 논리의 잠식 등 기존의 시스템으로 감당하기 힘든 사회문제를 시민들이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민주주의의 가치와 생활양식을 배우고 체화하기 위한 사회 전반의 교육은 매우 시급한 실정입니다. 하지만 민주주의 학습이 갈 길은 여전히 멀어 보이네요. 교육기본법 제2조를 보면,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을 교육의 근본적인 목적으로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법은 성인교육의 6가지 영역 중 하나로 “시민참여교육”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학교 교육과 평생교육을 통해 민주제를 운영할 시민이 자연스럽게 양성되어야 하지만, 권위주의적 국가체제와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입시위주 교육정책으로 인해 대부분의 시민들은 민주주의에 관해 학습하고 훈련할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또한 우리 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평생교육은 직업교육, 취미교육에 과도하게 편

중대 있어, 민주주의 학습은 그 중요성과 필요성에 비해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시민들의 민주적 의식과 역량의 함양, 그리고 건전한 시민사회의 형성이 우리사회의 발전을 위한 불요불급한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 민주주의 학습은 무엇일까요?

현재 한국 사회에서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합의된 개념 정의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민주시민교육을 한국적 상황에서 정의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 그리고 ‘시민교육’에 대한 개념정의와 내용적 합의가 필요하지만, 이 두 가지에 대한 개념정의는 좀처럼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치학에서 ‘민주주의’ 용어만큼 다양하게 정의되는 단어도 없습니다. 결국 ‘민주시민교육’이란 용어의 개념정의도 그간 한국 사회에서 진행된 논의를 토대로 정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시민교육’이란 시민이 민주주의의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원리와 제도를 이해하며 민주시민으로서 역량을 높여 공동체 삶의 향상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려는 제반 교육 및 활동(민주시민교육거버넌스, 2011)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시민이 민주주의의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원리와 제도를 이해하며’ 즉 「시민성 교육」이며, ‘공동체 삶의 향상을 위해

<표 1> 기존 활동 단체의 민주시민교육 정의와 기본원칙

단체	정의	기본원칙
민주시민교육 거버넌스 (2011)	“민주시민교육”이란 시민이 민주주의의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원리와 제도를 이해하며 민주역량을 높여 공동체 삶의 향상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려는 제반 교육 및 활동을 말한다.	① 시민주도성 ② 다양성 존중 ③ 참여자 중심 ④ 정치적 중립 ⑤ 독립성·자율성
시민사회 연대회의 (2015)	“민주시민교육”이란 모든 국민이 민주주의의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가지는 권리와 의무에 기초하여 일상생활의 각 영역에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자질과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모든 형태의 교육을 말한다.	① 권리와 책임의식 함양 ② 정치적 중립 ③ 국민의 자유로운 참여 ④ 기관 독립성 ⑤ 지속성(평생 동안 장려)
선거정치교육법안 (2013)	“선거정치교육”이란 선거 및 정치생활에서 국민의 주권의식을 양양하고 국민이 민주시민으로서 이상적인 사고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며 정치적 의사형성과정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① 민주적 기본질서 ② 개인이나 정당 또는 단체이익 금지 ③ 자발적 참여 ④ 개방적 방법
서울시조례 (2014)	“민주시민교육”이란 민주사회의 지속발전을 위한 지식·가치·태도 등 민주시민으로서 요구되는 자질과 소양을 함양하고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① 권리와 책임의식 함양 ② 공익적 목적 ③ 보편적 접근성 ④ 자발적 참여
징검다리교육 공동체 (2017)	정치적 사안에 대한 이해와 민주시민의 관점 및 태도를 갖추도록 하는 정치교육.	① 주입교화 금지원칙 ② 논쟁성 유지원칙 ③ 이해관계 고려원칙
선거연수원 (2017)	시민이 주권자로서 책임 있는 자세로 선거·정치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고, 나아가 국가와 지역 및 세계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성숙한 민주주의의 지속, 발전을 위하여 민주시민의 자질과 소양을 함양하는 학습을 말한다.	① 정치적 중립성 ② 민주성 ③ 참여성(자발적 참여) ④ 보충성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즉 「정치참여교육」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시민사회연대회의(2015)에서는 '민주시민교육'이란 모든 국민이 민주주의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가지는 권리와 의무에 기초하여 일상생활의 각 영역에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자질과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모든 형태의 교육으로 정의합니다. 여기에서는 '국민이 민주주의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가지는 권리와 의무' 그리고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자질과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즉 「시민성 교육」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선거정치교육법안(2013)에서는 "선거 및 정치생활에서 국민의 주권의식을 양양하고 국민이 민주시민으로서 이성적인 사고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며 정치적 의사형성과정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으로 정의합니다. 여기에서는 선거 및 정치 분야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맥락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국민의 주권의식을 양양하고 국민이 민주시민으로서 이성적인 사고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며 정치적 의사형성과정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은 「시민성 교육」이며,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함양'하는 부분은 결국은 「정치참여 교육」을 의미합니다.

서울시조례(2014)에서도 '민주시민교육'이란 민주사회의 지속발전을 위한 지식·가치·태도 등 민주시민으로서 요구되는 자

질과 소양을 함양하고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교육을 말합니다. ‘민주사회의 지속발전을 위한 지식·가치·태도 등 민주시민으로서 요구되는 자질과 소양을 함양’하는 「시민성교육」과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교육’ 즉 「정치참여 교육」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징검다리교육공동체(2017)에서는 ‘정치적 사안에 대한 이해와 민주시민의 관점 및 태도를 갖추도록 하는 정치교육’ 즉 「시민성 교육」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민주시민교육은 「시민성 교육」과 「정치참여 교육」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시민이 민주주의 정치체제의 구성원으로 역할을 인식하고 정치사회 참여에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를 획득하는 교육”입니다.

최근,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하여 「시민력」이라는 말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시민력」이란 지역사회에서 “자율적인 시민이 상호연계하여 지역사회운영에 참여하는 활동, 또는 지역사회가 직면한 제반 문제해결을 위하여 주민 스스로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능력(Social Civic Power)”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시에서 강조하고 있는 「협치」와도 맞닿아 있는 개념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시민력」을 기르기 위해서 “시민이 자발적, 주체적으로 시도하는 민주시민교육을 민주시민교육의 범위 안에 포함시켜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민의 자발적, 주체적인 학습만이 포함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방

정부나 시민단체 등에서 제공하는 시민교육에 참여를 계기로 시민은 주체적인 시민으로 ‘재탄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시민이 교육 참여를 통해서 시민성과 정치참여에 필요한 역량을 키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2016년 촛불혁명 이후 한국 사회에서 민주시민교육을 고려할 때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가 시민의 ‘자기 역량개발과 삶의 질 향상’ 부분입니다. 한국 사회는 광장민주주의를 경험하면서 시민 스스로가 정치적 주체임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시민은 민주주의 시민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역할과 자신의 일상적 삶이 연계된 형태의 학습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즉, 민주시민교육은 공공적 영역에서 시민의 역할에만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시민 개인의 역량은 물론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요소는 「민주시민교육」으로 개념 정의하는 것이 더 적절할 수도 있습니다. “시민 개인의 역량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교육은 평생교육과도 맥락이 닿아 있습니다. 스웨덴에서는 ‘성인교육’ 또는 ‘평생교육’차원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접근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민주시민교육이 평생교육차원에서 논의되는 배경에는 시민 개인의 역량 강화나 삶의 질 향상이 지역사회는 물론 민주주의 수준이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논의한 「시민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민이 지역에 대한 아이덴티티, 지역이 직면한 다양한 해결 과제에 대한 인식, 해

결방안의 모색 그리고 해결을 위해 시민들이 상호 연계하여 행동, 참여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스킬이나 능력이 필요합니다. 결국 이러한 스킬이나 능력은 평생교육을 통해서도 얻어질 수 있습니다. 평생교육은 시민교육만을 목표로 하지는 않습니다. 개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삶의 질을 제고하는 다양한 학습을 통해서 국민 개인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개인의 역량 강화는 시민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역할이나 참여하는 「시민력」을 향상하는 지원, 보완 역할을 합니다. 민주시민교육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시민교육이 목표나 내용으로 설정하고 있는 「시민성」 교육, 「정치참여」 교육을 지원하고 보완하는 역할을 평생교육이 수행합니다. 최근에는 민주시민교육과 평생교육 간 접점, 즉 교집합 부분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민주시민교육과 평생교육 간 상호 피드백<sup>feedback</sup>이 강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평생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이 상호 교집합이 증가하고 있고 상호 피드백<sup>feedback</sup>이 강화되고 있기는 하지만, 「시민」의 탄생은 정치적인 존재로서 시민을 의미합니다. 근대정치사를 살펴보면, 프랑스 혁명을 계기로 근대적 의미의 「시민」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절대왕정의 통치에 저항하여 자신들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혁명에 참여하였고, 그 결과 시민들은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비로써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민」은 정치공동체의 구성원이라는 자기인식을 가지고, 정치공동체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개

인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시민」은 정치공동체의 구성원입니다. 그러므로 「시민」을 양성하기 위한 시민성, 정치참여 교육인 민주시민교육은 정치사회, 정치영역에서 활동, 참여를 전제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개인에게 초점이 맞춰지는 평생교육과 정치적 존재인 「시민」을 양성하는 민주시민교육은 엄연히 구별될 필요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현대적 의미의 기본권이 헌법적으로 규정되기 시작한 것은 버지니아 권리장전(1776)을 필두로 한 북미의 여러 주의 권리장전과 프랑스 대혁명의 산물인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1789)’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1789년 프랑스의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은 제2조 제1항에서 “모든 정치적 결사의 목적은 인간의 자연적이고 시효로 소멸되지 않는 권리를 보전함에 있다”고 선언함으로써 목적으로서 인간과 그 인간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국가가 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선언은 오직 법을 통해서만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고 밝혀 법에 의한 권리의 제한만을 인정함으로써 인간의 자유를 확보하려는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프랑스 시민혁명은 혁명의 주도세력인 부르주아 계급이 구체제 하에서 억압과 빈곤으로 고통 받던 민중의 요구보다는 자기 계급의 이익을 위해 혁명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물인 근대 시민헌법은 국가로부터의 간섭에 자유로울 수 있는 권리에 초점을 두게 되었습니다. 또한 국가기관의 구성을 위한 참정권 역시 제한

적으로 부여되었으며, ‘인간의 권리’라는 개념이 여성, 노예, 피지배 인종에게는 형식적으로도 인정되지 못하였습니다. 프랑스 혁명 이후, 근대적 시민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은 실질적 권리가 아닌 형식적 권리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부르주아계급 주도의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재화의 불평등한 분배를 저지할 수 있는 뚜렷한 대안을 갖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목적으로서 인간이라는 가치를 단 근대 시민헌법은 자본의 지배라는 현실 앞에서 인간이 자본증식의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자유권 보장을 중심으로 한 시민헌법의 한계는 1871년 파리 코뮌을 통해서 민중의 행동으로 표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시민」은 기본권은 물론 정치적 권리를 가진 정치사회의 구성원으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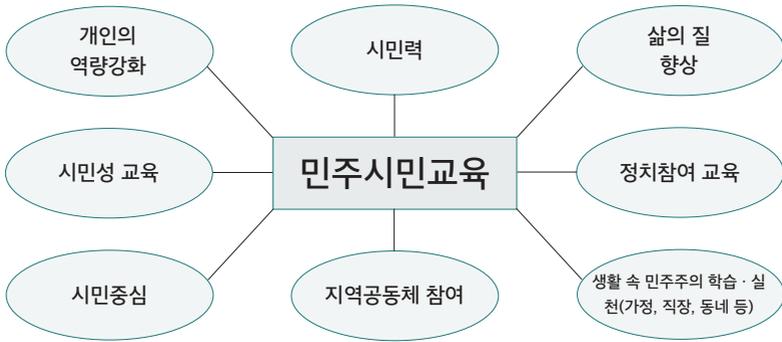
또 하나 정리하고 넘어가야 하는 문제는 추상적인 민주주의의 구성요소나 국가차원의 정치공동체 참여에 필요한 시민의 자질이나 활동보다는 동네, 직장, 학교, 가정, 단체 같은 지역사회 공동체나 일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생활 민주주의 체험이나 활동을 통한 민주시민교육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국가 단위의 민주주의 기본원리나 지역사회인 마을이나 동네 단위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민주주의 구성원리가 다른 것은 물론 아닙니다. 학습에서 활용하는 사례나 구체적인 참여를 지역 공동체나 가정, 직장, 동네와 같은 규모에서 가능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국민이 민주주의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가지는 권리와 의무’

그리고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자질과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즉 「시민성 교육」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대규모사회인 국가를 단위로 한 역할이나 활동에 초점이 맞춰져 왔습니다. 현실적으로 시민이 국가적인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기회는 국회의원선거, 대통령선거, 국민투표, 또는 국가적 쟁점이 되는 정책결정이나 추진에 찬성, 반대하는 데모나 집회에 참석하는 경우처럼 그다지 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가정책결정에 반대, 찬성하는 데모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심지어 국회의원선거, 대통령선거에서도 참가자가 겨우 50%를 넘기는 정도입니다. 2016년 겨울, 매주 촛불집회에 대규모로 시민들이 참여하는 일은 자주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수준을 「마을 민주주의», 「동네 민주주의», 다시 말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자치단체 정도 수준의 「지역 민주주의」로 축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치참여 교육도 기존의 국가차원에서 차원이 아니라 시민의 일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의사결정에 참여를 전제로 시민이 학습하고 활동에 참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민주시민교육에서 기존의 공급자 위주의 교육에서 수요자 중심의 학습으로 관점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의 민주시민교육의 역사를 살펴보면, 민주시민교육을 명분으로 ‘반공교육’, ‘윤리교육’, ‘체제동원교육’ 등을 벌여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합니다. 각 시기별로 정부가 국민을 통치의 대상으로만 인식하고 국민의 동원에 필요한 교육을 중심으로 진행해온 것

<그림> 시민학습 이해도



입니다. 결국 공급자인 국가가 필요한 목적에 따라 시민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정치교육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현재, 정부나 관련기관에서 실시하는 민주시민교육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2000년대 접어들어, 한국에서 민주시민교육이 본격화되고 추진체계를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국가기관 주도의 민주시민교육에 대해서 시민단체는 여전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시민 중심의 민주시민교육은 시민의 학습 니즈에 대응하는 교육콘텐츠, 프로그램, 체험 및 참여 기회의 제공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존과 같이 국가, 학교, 지방자치단체가 작성, 생산하여 제공하는 민주시민교육 콘텐츠가 아니라 시민이 요구하는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어떤 콘텐츠로 민주시민교육

을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시민들의 니즈를 수렴하여, 그것에 적합한 형태로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좀 더 적극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시민이 스스로 학습하는 데 필요한 공간, 콘텐츠, 비용, 프로그램, 비품들을 지원, 제공하는 것입니다. 시민의 학습이 개인의 역량강화는 물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민주주의의 구성원으로서 자질과 역량 강화에 필요한 것이라면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학교 등에서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행정기관의 역할은 시민들이 스스로 학습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콘텐츠, 프로그램, 강사, 장소, 예산 등을 지원하는 역할에 중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시민으로 사는 것의 중요성

우리는 잘 살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혼자된 개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정, 동네, 서울시, 대한민국, 그리고 아시아 더 나아가서는 지구촌의 일원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옆집 식구들, 옆 동네 사람들, 이웃 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하고 서로 배려하고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겠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국내적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지구촌의 국제적 이슈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단지 관심만이 아니라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함께 해결하기 위하여 해결방안을 모

색하고 실제로 참여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현상에 대하여 비판적인 시각에서 분석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국제사회에 눈을 돌리면, 지금 무관심으로 일관할 수 없는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쟁, 자연재앙, 난민과 빈곤, 생태계 파괴 등의 문제가 21세기를 살아가는 현재에도 마스크를 도배하고 있습니다. 최첨단의 과학세계가 21세기를 맞이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평화와 생존의 문제는 지구와 그곳에서 살아가는 인간들의 공동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20세기는 물질의 힘이 인간의 삶을 지배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현재도 국민소득을 높이기 위해서라면 무조건 성장해야 하는 무한경쟁체제로 달려가는 중입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전 세계 20여 개국도 안 되는 선진국들의 근대화과 세계화 논리가 숨어 있습니다.

1980년대 초, 영국과 미국으로부터 시작된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지구촌 곳곳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난 30년간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결과로 세계 인구의 1%가 전 세계 재산 총액의 40%를 차지하고, 가장 부유한 상위 10%가 전체 자산가치의 85%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에선 26억 명이 하루에 채 2달러도 안 되는 돈으로 살아가며, 그 가운데 족히 1/3은 1달러 미만으로 하루를 견디고 있습니다.<sup>1</sup> 극단적인 양극화 현상과 부의 편중이 그

---

1 카를-알브레히트 이멜, 《세계화를 둘러싼 불편한 진실》, 2009, 20쪽.

어느 때보다 심각한 수준입니다. 기후변화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1962년 레이첼 카슨이 쓴 《침묵의 봄》으로부터 1972년 로마클럽이 발표한 《성장의 한계》 등까지, 지난 반세기 이상을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문제가 지구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할 것이라는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여전히 이 문제에 대해 명확한 해법이 없는 상태입니다. 매년 ‘지속가능한 발전, 지속가능한 성장’을 부르짖지만, 세계는 점점 지속가능하지 않은 사회로 치달아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심각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뾰족한 해결방안이 없고 우리가 방관하고 있는 배경에는 교육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근대 교육은 아는 것이 전부였죠. 어두운 세상에 한줄기 빛을 비추면 밝아지듯이, 무지한 사람을 깨우치면 발전할 것이라는 계몽주의적 사고가 지난 250여 년을 지배해왔습니다. 데카르트가 등장하기 전 사람들은 인간의 지식과 지혜를 넘는 또 다른 순환질서가 존재하고 있음을 평생의 삶 속에서 깨우치고 살았습니다. 자기가 모르는 신비한 존재에 대한 겸허함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과학의 이름으로 커져만 가는 인간의 오만함을 그저 덮어두었던 걸까요? 20세기 들어 과학의 믿음, 성장의 믿음을 기반으로 산업화가 가속되면서 전 세계가 엄청난 발전을 이룬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가난과 질병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굶주림에 죽어 가는데, 다른 한편에서는 시장 가격을 맞추기 위해 곡물을 바다에 버리고, 매일매일 고기를 먹기 위해 인류가 생산한 곡물의 40%

를 소먹이로 주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결국 끊임없는 성장에 기반한 산업화의 결과, 소수는 초호화 문명이라는 혜택을 누렸지만 지구 생태계가 파괴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근본적인 고민인 가난과 질병문제를 아직까지 극복하지 못한 채, 현재도 그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재를 인식하고 개선하기 위한 교육과 실천이 전 사회적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프랑스 정치철학자 알렉시스 드 토크빌(Alexis de Tocqueville)에 의하면, 민주주의는 민주에게, 좀 더 정확하게는 유권자에게, 투표를 통해 직접 의사를 묻는 제도입니다.<sup>2</sup> 시민사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시민이 스스로의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시민으로서 자질을 학습하고 시민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인식을 가지며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지요.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해선 그만큼 시민·시민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 시민의 권리의식은 인간적인 삶의 출발점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이 갖는 기본 권리와 덕목의 묶음을 시

---

2 토크빌은 자신의 저서인 '미국의 민주주의'에서, 민주주의는 사회 대다수의 행복과 평등을 가져 온다는 점에서 정의롭지만, 개인주의와 물질주의를 불러와 공적 영역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을 멀어지게 하고 다수에 예측되게 만들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그래서 다수에 의한 전체적인 민주주의가 아닌 자유와 가치를 보장하는 민주주의를 그렸고, 공적 영역의 필요성을 말하였다.

티즌십(citizenship)이라고 합니다. 민주주의 사회는 어떤 사회일까를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투표권을 갖게 되는 것이 민주주의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통선거가 확립된 것은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 이후에야 나타난 일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서구의 여러 나라들도 성, 인종, 소득, 교육, 종교에 따라 투표권 부여에 여러 제한을 두었습니다. 오늘날에는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보통선거권도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의 요구와 투쟁을 통해서 힘들게 쟁취되어왔습니다.

영국의 사회학자 마샬은 이런 과정을 통해 영국의 시티즌십이 형성되었고, 시티즌십은 시민권(civil rights), 참정권(political rights), 사회권(social rights)으로 확장되는 과정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샬에 의하면, 시민권이란 주로 개인의 안전과 권리에 관한 권리이고, 참정권은 정치 참여에 관한 권리, 사회권이란 모든 시민이 경제·사회적으로 품위 있는 기본 수준 이상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따라서 현대사회에 있어 시티즌십을 알기 위해서는 시민권, 참정권, 사회권이 생활공간인 지역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 척도를 알 수 있는 OECD 평가 자료를 보면, 한국의 민주주의 지수는 꽤 높게 나옵니다. 평가 항목 중 “참여제도가 제정되어 있는가?”가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체감하는 민주주의의 수준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는 지방자치제도, 주민발의, 주민소환, 주민참여

예산제도 등 법·제도상으론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제도는 만들어져 있지만 실질적인 효과를 보기 위한 문턱은 너무나 높기만 합니다.

## 시민은 공동체 속에서 만들어지는 존재

일상에서 주민들이 참여해 시민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주민참여예산을 처음 실시한 브라질 포르투알레그리에서의 주민 활동입니다. 처음 브라질에서 참여예산을 시작한 이유는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산이 별로 없다 보니 적은 예산으로 주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주민이 우선순위를 결정하도록 한 다음 그대로 예산을 집행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론 시장이 자신의 권한을 주민에게 돌려주겠다는 의지도 있었습니다.

브라질 포르투알레그리에서 10여 년 동안 주민참여예산을 집행하면서 시민들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처음에는 시장에 대해 훌륭한 정치인이라고 고맙다고 생각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시장이라면 당연히 그 정도는 해야지'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참여예산의 긍정적인 점은 재정 민주주의로, 예산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체제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측면은 참여과정을 통해 주민의 의

<그림> 바이오치 Gianpaolo Baiocchi가 쓴 ‘마르코 이야기’



식이 바뀌고, 지역사회의 권력구조를 바꾸는 참여 민주주의를 실현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사회학자인 바이오치 Gianpaolo Baiocchi는 자신의 글 ‘마르코 이야기’ *The Citizen of Porto Alegre*를 통해, 어떻게 한 주민이 이러한 참여로 인해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르코는 도시로 이주한 지 8년 정도된, 잡역부로 살아가는 가난한 주민입니다. 마르코는 초등학교 교육만을 받았고, 고향마을에서 버스비를 빌려 포르투알레그리로 들어와 빈민가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마르코는 이웃 사람의 손에 이끌려 우연히 주민 참여 예산제 주민총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이 얼마나

내 삶을 변화시킬까?’ 당연하게도 처음에는 회의적이었다고 하죠. 그러나 그 첫걸음이 마르코의 삶을 실제로 변화시켰습니다.

마르코는 총회에서 이야기되는 대부분의 안건을 자세히 알지 못했지만, 설명을 들으며 조금씩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의 문제와 직접 연관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그러다 마르코는 대의원으로 선출되었고, 참여예산제의 진행과정과 그 규칙에 관해 배울 수 있었죠. 이런 과정에 참여하면서 마르코와 동료 대의원들은 자기 동네에 도로를 놓고 하수도를 설치하도록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그 뒤 마르코는 점점 더 열심히 참여했고, 동네모임들을 만들면서 자신의 꿈이었던 무단 점거지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정책을 통과시켰습니다. 예전에 한 번도 사회운동에 참여하거나 단체에 가입한 적이 없었던 마르코는 이제 매주 총회에 참석하고, 때로는 새로 온 참여자에게 주민참여 예산제를 설명하는 역할도 맡고 있다고 합니다. 평범한 주민이 능동적인 활동가로 변신한 셈이지요.

## 한국에서도 시민은 공동체 참여 속에서 탄생

정치학자들에 의하면 일차적인 민주화는 공정한 선거를 통해 평화로운 정권교체가 이루어질 때 달성된다고 합니다. 정권교체가 여당 내부의 교체라면 그것은 아직 일차적인 민주화가 완료

되지 않은 상태이죠. 공정한 선거를 통해 야당으로 정권이 평화적으로 교체되었을 때 비로소 민주화의 1단계가 달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한국의 민주화는 1998년 김대중 정부의 출범으로 그 1단계가 완료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 2008년부터 야당이 집권하게 됨으로써 한국은 일단 형식상으로는 여야 정권 교체가 공정한 선거절차에 따라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는 민주주의 국가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1987년 민주화운동으로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한 지 30년이 지난 지금, 우리 사회가 성숙한 민주사회에 도달하였는지는 스스로 반문해야 할 문제들이 많습니다.

공정한 선거를 통한 평화로운 정권교체는 민주화의 첫 단계일 뿐입니다. 선거만으로 민주주의가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공정한 선거, 그리고 투표권의 자유로운 행사는 민주주의에서 중요합니다. 매표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선거에 강압이 행사되는 사회를 민주주의 사회라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선거란 시민이 주인 역할을 하는 한 가지 방식, 시민 국정 참여의 한 가지 방식일 뿐입니다. 대의 민주주의는 선거 이외에도 다양한 분야와 사안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될 때, 보다 착한 제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대의민주주의의 단점을 보완하는 ‘참여 민주주의’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토크빌은 《미국의 민주주의》라는 책을 통해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참여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토크빌이 미국을 돌아보

며 주목한 것은 미국 북동부 뉴잉글랜드 타운의 타운십<sup>township</sup> 제도였습니다. 인구 2~3천 명 단위 타운의 주민들은 행정 공무원들을 투표로 뽑지만, 공공사안에 대한 결정을 공무원들에게만 맡겨두지 않았습니다. 교육, 조세, 치안, 공공사업 등 마을 현안에 대해 마을 회당에 모여 공무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여 해결방안을 찾았습니다. 그 배경엔 자치의 전통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자치의 힘은 시민들 스스로 다양한 결사체를 만들어 공적 문제에 대해 직접 대응해나간다는 데서 옵니다. 토크빌은 “자치제도 없이는 자유 정신을 가질 수 없다”고 하면서, 자치적 결사체의 전통이 민주주의와 자유를 묶어주고 있음을 통찰했습니다.

결국 선거만 있고 시민의 직접참여가 없다면 이는 온전한 민주주의라 할 수 없습니다. 많은 독재국가가 선거라는 형식만 있지 밑으로부터 올라오는 시민의 실제 정치참여는 없습니다. 민주주의 헌법이 강조하는 기본권의 상당 부분은 바로 이 시민의 직접적인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그것인데요. 이러한 기본권의 행사를 통해 시민들은 선거가 아닌 일상적 시기에도 자신들의 주장을 표현하고 이를 행동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 민주주의는 민주제를 운영할 시민이 있을 때 유지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실제로 살아있게 하려면 내가 살고 있는 현실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잘 안 보이는 것도 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서로가 합의할 수 있는 의사결정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의사결정 권한을 시민들이 갖는 것입니다. 미국 로체스터 시의 ‘마을을 만드는 이웃들’[Neighbors Building Neighborhood](#)이 벌이는 마을회의를 보면, 여기서 공무원이 하는 일은 장소를 잡고, 불을 켜고 끄는 역할입니다. 나머지는 주민들이 모여서 결정하고, 주민들이 논의하다 막힐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행정의 지원을 받기도 합니다.

민주주의란 서로를 시민으로 인식하는 것부터 시작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민주주의자가 되기 위한 훈련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그대로 듣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는 것, 다른 사람과의 관계망을 잘 형성해나가는 것들이 중요하다면, 민주적으로 어떤 일을 같이 하기 위한 구성방식이 더 중요해 보입니다. 민주적 의사소통을 전제로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그 과정에서 들어오지 않는/못한 사람들을 배려하는 것 말입니다.



# 제2장

## 시민학습의 이모저모





우리는 흔히 민주주의 학습에 관해 명확히 알아야만 그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사랑’에 관해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사전을 찾아보면 사랑에 관한 정의가 나와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많은 사랑에 관한 나름의 생각을 가지고 사랑을 하고, 사랑에 관해 이야기 합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들이 모여 사랑에 관한 우리의 생각이 형성됩니다. 마찬가지로 민주주의 학습에 관해 명확히 알아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관해 명확히 알지 못하더라도 그것을 하고, 그것에 관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 우리의 민주주의 학습을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민주주의 학습에 관해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기서는 민주주의 학습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3가지 요소인 ‘민주’, ‘시민’, 그리고 ‘교육’의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민주주의 학습	민주주의	민주주의 학습의 가치와 내용
	시민	민주주의 학습의 주제
	교육	민주주의 학습이 이루어지는 매개체

## 제도로서의 민주주의

제도는 사람들의 상호작용과 역사적 과정을 통해 정착된 관습이나 도덕, 법률 따위의 규범이나 사회 구조의 체계 등을 의미합니다. 민주주의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제도들에 관한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일종의 운영체제 OS, Operating System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컴퓨터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컴퓨터가 구동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운영체제가 장착돼야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 [Microsoft](#)가 개발한 윈도우 [Window](#)가 가장 많이 채택되는 운영체제입니다. 흔히 운영체제는 윈도우 한가지라고 알고 있지만, 운영체제에는 맥 [Mac](#)이나 리눅스 [Linux](#), 그 밖에도 다양한 것들이 상황에 따라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운영체제는 환경의 변화에 따라 문제가 나타납니다. 컴퓨터를 사용하다 보면 운영체제에 문제가 생기거나 새로운 환경 대응에 한계가 드러나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패치 [patch](#)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아니면 개선된 [Up-grade](#) 판본 [version](#)의 운영체제로 교체하기도 합니다. 정치와 사회의 운영체제라 할 수 있는 민주주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 대한민국 헌법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대의민주주의라는 운영체제가 현대 사회에서 가장 즐겨 채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운영체제에 대의민주주의만 있는 것은 아니며, 인류가 발전시켜온 다양한 색깔의 민주주의 제도들이 있습니다. 아울러 민주주의는 실제 구현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난점들을 지니고 있기도 하고, 환경의 변화에 부응해 민주주의의 형태 역시 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민주주의는 역사적인 과정을 통해 변화·발전해 왔습니다.

## 민주주의 제도의 난점들

대의민주주의 제도가 가진 여러 가지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요구되는 지점들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먼저 대의민주주의 제도가 안고 있는 본원적인 문제로, 권력을 위임받은 대표자와 주권자 즉 시민의 의사 사이의 불일치 문제입니다. 대표자와 주권자 사이의 의사가 완전히 일치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둘 간에 충분한 공통성은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특히 대표자가 무능하거나 주권자의 의사에 현저하게 반하거나 사리사욕을 앞세우는 경우, 대의민주주의 제도는 왜곡됩니다. 나아가 대표자가 위임 받은 권력을 사유화하고 시민들을 지배하려 든다면 그것은 민주주의가 아닌 상태가 될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비단 논리적인 가정에 머무르지 않고, 역사를 통해 실제로 일어났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 다른 난점은 사회 환경의 변화를 대의민주주의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앞서 대표자와 주권자 의사 사이의 불일치 문제를 짚어 봤는데, 현대사회의 문제와 욕구들이 점점 더 복잡다양해지면서 대표자들이 그 복잡 다양한 맥락을 수렴하고 다루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대의민주주의가 직접민주주의의 비효율성을 보완한다는 유용성 역시 도전 받고 있습니다. 사회의 각 부분에 자치권을 부여하면, 해당 부분의 구성원들이 기민하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텐데, 대의제 민주주

의 절차를 밟는 것이 오히려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이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 대의 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직접 민주주의 제도들

현대 민주주의 제도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대의민주주의 제도가 지닌 한계점들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선은 대의민주주의를 중심에 두되 민주주의의 원형적 성격을 보존하고 있는 직접민주주의 제도를 가미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국민투표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국가의 중대한 사안에 관해 전 국민에게, 좀 더 정확하게는 유권자에게, 투표를 통해 직접 의사를 묻는 제도입니다.<sup>3</sup> 또한 우리나라는 각 지역의 공공의 문제를 지방정부와 주민들이 자치적으로 다루도록 하는 지방자치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의 수준에서는 좀 더 다양한 직접민주주의 제도들이 마련돼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은 주민소환, 주민발안, 주민투표 등의 직접민주주의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민소환은 특정 요건을 갖춘 투표를 통해 자신들의 손으로 뽑은 대표자(지방자치단체장과 의원)를 소환하는 제도입니다. 주민발안은 대표자인 의회를 통하지 않고 직접 조례를 제·개정 또는

3 대한민국 헌법 제72조.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폐지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주민들의 결정이 바로 조례가 되는 것은 아니며, 주민들이 일정 수 이상의 서명을 통해 결정한 사안을 의회가 의결하도록 하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조례개폐청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민투표는 자신들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중대한 사안을 주민들이 투표를 통해 직접 결정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제도적인 것은 아니지만 헌법상 명시된 기본권인 집회나 시위를 통한 직접행동도 적극적인 직접민주주의 실현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집회나 의회나 영문표기가 assembly로 동일한 것을 보면, 직접행동과 의회는 민주주의에 있어서 일맥상통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대표자와 주권자 간의 간극을 줄이기 위한 참여민주주의 제도들에 대한 논의와 실천이 진전돼 왔습니다. 참여민주주의 제도들은 정부가 시민들의 의사에 좀 더 잘 부응하기 위해 채택하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시민사회의 논의와 요구에 의해 도입된 경우가 많습니다. 참여민주주의 제도 역시 지방자치 수준에서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먼저 지방정부의 행정활동에 대한 시민들의 통제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들이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제도는 정부의 활동을 통해 생성된 공공정보를 시민들이 요구해서 볼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지방정부의 행정활동이 잘못됐다고 판단되는 경우, 주민들은 지방정부에 감사를 요청하고(주민감사청구), 감사를 통해 잘못이 드러난 경우 그 책임을 법적으로 물을 수 있습니다(주민소송). 한편 지방정부의 정책과정에 시민들이 참여

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두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전통적인 민원, 공청회, 여론조사, 자문위원회 등과 함께 좀 더 적극적인 장치들이 모색돼 왔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지방재정법이 규정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입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일부를 의회가 아닌 주민들이 위원회를 구성해 직접 편성하는 과정이 전국적으로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 협치와 시민력

민주주의 제도의 변화와 관련해서 눈에 띄는 흐름 중 하나는 협치와 관련이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공공의 문제해결의 주체는 정부였는데, 최근 들어 정부가 공공의 문제를 다룸에 있어 시민사회 주체들과의 적극적으로 협력하려는 경향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이전의 정부와 시민사회간 협력이 정부가 하지 못하는 부분을 보완하는 것이었다면, 최근에는 시민사회가 공공정책의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것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시민사회가 감시하고 무언가 요구하던 소비자에서 공공정책을 함께 만들어 가는 생산자로 그 역할이 변화해 가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이러한 흐름을 이전의 흐름과 구분해 ‘협치2.0’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는 대표자와 주권자 사이의 간극을 줄이는 또 다른 형태의 변화된 민주주의 제도의 시도라 할 수 있겠습니다.

## 시민 >>

### 어떤 사람들이 ‘시민’인가

시민의 사전적 의미는 민주 사회의 구성원으로 권력 창출의 주체로서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자발적이고 주체적으로 공공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사람입니다. 앞서 우리는 국가와 사회가 우리 공동의 삶을 담아내는 그릇이며, 그 그릇의 성격을 민주주의로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의 삶을 살아 내는 주체를 시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시민이라는 개념과 실천은 서구 사회에서부터 시작됐고 시민에 관한 우리 사회의 논의와 실천도 서구로부터 전파되었으며, 우리 사회의 현실과 만나면서 형성돼 왔습니다. 이에 따라 시민에 관한 서구의 논의를 간략히 살펴보는 것은 유용한 일입니다. 시민에 관한 서구의 논의를 살펴보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여기서는 우리에게 친숙한 서구 국가들이 민주주의 학습을 시민을 어떻게 바라보고 이야기 하고 있는지에 관해서만 간략하게 살펴볼 것입니다.

#### 1) 독일

독일에 있어서 민주주의 학습은 ‘정치교육’<sup>Politische Bildung</sup>이라 불립니다. 모든 교육은 그것을 통해 학습자가 변화되어 이르기를 바라는 지점, 즉 인재상을 지니고 있습니다. 독일 정치교육의 인재상은 한마디로 ‘비판적 시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독일인들은 나치

즘과 공산주의라는 두 가지 전체주의를 만들었던 역사로부터, 다시는 시민들의 손으로 이런 전체주의를 만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치교육을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독일 정치교육의 중심적인 지향은 시민들이 정치적 상황에 대해 이해하고,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있는 비판적 능력을 중시합니다.

### 정치교육에 관한 독일 연방 내무부 지침(1968) <sup>4</sup>

“첫째, 전통적인 정치교육의 주제인 반나치즘과 반공산주의는 앞으로도 견지돼야 할 지향이다. 둘째, 정치교육은 지금까지 민주주의를 ‘조화’와 ‘칭송’으로만 표현해 왔다. 또한 공동체와 협력관계의 지나친 강조는 정치의 본질을 오해하게 만들기 쉽다. 향후 좀 더 실제적 민주주의의 이해를 위해 이해관계, 갈등, 권력과 같은 개념들이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

## 2) 스웨덴

스웨덴에 있어서는 평생교육과 민주주의 학습은 상호 구분되지보다 동일한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스웨덴에 있어 민주주의 학습에 해당하는 것이 성인교육 [Folkbildning](#)인데, 성인교육의 주요 목적은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시민에 대한 교육이고,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자신의

---

<sup>4</sup> 독일 연방 정치교육원(<http://www.bpb.de>) 참조.

삶에 자신이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조건에 자신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닐까요. 스웨덴 사람들에게 있어서 교육은 하나의 서비스라기보다는 권리이고, 민주주의를 훈련하는 통로입니다. 스웨덴에서 가장 일반적인 교육 형태는 학습동아리 studiecirklar인데, 사람들은 흔히 스웨덴의 민주주의를 ‘학습동아리 민주주의’라 부르기도 합니다.

### 스웨덴 성인교육의 목적<sup>5</sup>

1. 민주주의를 강하게 하고 발전시킨다.
2.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사회발전에 참여하도록 한다.
3. 교육격차를 줄이고 사회 안에서의 계몽과 교육의 수준을 높인다.
4. 문화에 대한 관심을 넓히고, 문화활동 참여를 증진한다.

### 3) 영국과 미국

한편 서구 사회이면서도 영국과 미국의 경우는 조금 다른 결의 시민상을 지향하고 있는 듯합니다. 영국의 경우 왕족을 비롯한 지배계층이 시민들과 타협한 명예혁명을 거쳤습니다. 지금도 시민들의 세금으로 왕족이 유지되는데, 왕족은 시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덕목이 필요할 것입니다. 언론을 통해 영국왕족이 솔선해서 참전하는 모습을 보며 흔히 지도층의 책임 nobles oblige이라고 평가하

5 스웨덴 성인교육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olkbildningsradet.se>) 참조.

는 말을 듣게 됩니다. 이런 문화는 지도층뿐 아니라 시민들에게도 적용됩니다. 영국에서 민주주의 학습은 흔히 시민성 교육(citizenship education)이라 불리는데, 시민들이 공동체를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참여하는 '적극적 시민성'(active citizenship)을 강조합니다. 미국의 경우 북미대륙에서 건국을 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없을 때부터 시민들이 모여 공공의 문제를 논의하고 결정하고 직접 처리하는 전통을 중시했습니다. 그래서 역시 공동체를 위한 '시민적 관여'(civic engagement)를 중요시합니다. 물론 이런 요소들이 민주주의 학습 내용의 전부는 아니지만, 각 나라의 역사적·사회적 배경 속에서 형성된 핵심적인 시민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 영국 민주주의 학습의 요소 <sup>6</sup>

1. 사회적-도덕적 책임감(Social and moral responsibility)
2. 공동체 참여(Community involvement)
3. 정치적 문해력(Political literacy)

#### 4) 프랑스

한편 프랑스의 경우 '시민성을 향한 교육'(éducation à la citoyenneté)을 통해 '공화국 시민'을 강조합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공화'의 가치는 기본적으로 동료시민들과 함께 살아가고, 개인과 모두의 관

---

6 영국 시민교육자문위원회, 《학교 시민교육과 민주주의 수업》,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8.

계를 인식하는 가운데 공동의 가치를 설정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sup>7</sup>

### **프랑스 민주주의 학습의 요소**

“함께 살아가기 위한 기본적 지식”

“사회, 경제, 정치질서에 대한 지식”

“프랑스 사회의 최근 사회적 이슈에 대한 능동적 참여”

---

7 한국민주주의연구소, 《시민사회의 시민교육 체계 구축과정 연구: 독일, 프랑스, 스웨덴, 미국, 영국을 중심으로》, 2015

## 시민 >>

### 시민과 민주주의

좋은 시민 없이 좋은 민주주의는 없습니다. 즉 좋은 민주주의는 좋은 시민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민주주의와 시민의 거리가 가까워져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시민들에게 있어 민주주의는 먼 이야기처럼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가끔 민주주의라 하면 너무 고귀한 것, 뭔가 그것을 위해 헌신해야 할 것만 같고, 특별한 사람들의 것, 그러다보니 내 삶과 크게 관련이 없는 것으로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민주주의라는 것이 처음 태어날 때, 그리고 무너지려는 그것을 지켜낼 때 많은 헌신이 필요한 것 또한 사실이며, 한국에 있어서도 그러했습니다.

“인민을 위해 민주주의가 만들어졌지, 민주주의를 위해 인민이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sup>8</sup>

민주주의가 고귀한 것이며 그것을 지키는데 헌신이 필요하지만, 중요한 건 사람이 민주주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가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즉 시민이 목적이며, 민주주의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도구들을 사용

---

8 엘머 에릭 사츠슈나이더, 박수형·현재호 옮김, 《절반의 인민주권》, 후마니타스, 2008.

하며 살아갑니다. 요즘 가장 친숙한 도구는 뭐니 뭐니 해도 스마트폰이겠지요. 많은 사람들은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스마트폰과 함께 지내고, 잘 때도 머리맡에 두고 자곤 합니다. 그런데 수도 배관을 조이는 스페너와 같은 도구를 생각해 봅시다. 집에 하나쯤 있는 도구인데, 수도관에 물이 샐 때 이 도구를 찾게 됩니다. 민주주의가 도구라면 스페너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우리는 가족을 만날 때, 친구를 만날 때 늘 민주주의에 관해 이야기 하지는 않지만, 촛불 시위처럼 중요한 순간에, 무언가를 고쳐야 할 때 우리는 민주주의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급하게 써야 하는데, 집 어딘가에 있긴 있는데 못 찾거나, 찾았어도 어떻게 쓰는지를 모르거나 기억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무용한 도구일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고이 모셔져야 할 무엇이گی보다는 시민들이 주인으로 살아가고, 더불어 살아가는데 즐겨 사용돼 손때가 묻어 있어야 할 도구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무언가 잘못되어 갈 때, 동료 시민들과 무언가를 도모하려 할 때 꺼내 써야할 도구 말입니다.

## 개별화된 시민을 넘어: 시민의 연대

우리 사회에는 교육에 관한 ‘개별화’의 개념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교육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개별화된 사람들이 좋은 강사를 만나기 위해 모여 강의를 듣고, 강의를 끝나면 각자의 삶으로

홀어지는 모습 말입니다. 민주주의 학습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강의를 듣고 홀어지는 이미지도 그렇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도 주로 개별화된 시민들이 교육을 듣고 관용, 정의감, 공동체 정신, 참여의식 등을 각자 함양해야 하는 식의 이해가 일반적입니다.

“인간이 인간으로서 유의미성을 획득하는 것은 타자와 소통할 때다”<sup>9</sup>

하지만 교육이 개별화 된 채 이루어질지라도,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누군가의 아들, 누군가의 친구, 회사의 대리, 자원봉사 모임의 회원, 인터넷 카페지기 등. 시민들이 주인으로서 자신의 고유성을 형성하고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료 시민들과 더불어 사는 것을 통해 우리의 삶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평범한 보통의 사람(民)들은 그 관계 속에서 정체성과 신념을 형성하고 지켜나갑니다. 가끔 민주주의 학습에 참여한 학습자들이 교육을 통해 배운 내용은 너무 좋은데,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면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자신뿐이라 힘들다고 말하곤 합니다. 물론 그 관계가 부담이 되고 상처가 될 때도 많지만, 관계는 자기 자신을 만들어 가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따라서 민주주의 학습이 시민을 생각할 때 이런 점

---

9 한나 아렌트, 이진우 옮김, 《인간의 조건》, 한길사,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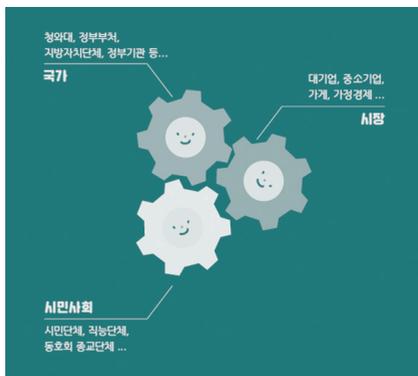
들이 고려돼야 할 것입니다.

민주주의 학습에 참여할 대부분의 시민들은 관계 속에서 살아 가다가 교육장에 온 것이며, 교육을 통해 배운 것을 품고 다시 그 관계 속으로 돌아갈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시민들은 친밀하고 신뢰하는 관계와 모임을 통해 민주주의와 관련된 상황을 마주하고 느끼며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사회가 갈수록 여유를 가지고 타인과 만나고, 공동의 관심사에 관해 대화하고, 함께 무언가를 도모할 계기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상의 민주주의를 형성하는 일이 시민 개개인의 도덕과 성실의 문제로 치환되기보다는,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일상의 민주주의를 접할 수 있는 사회적 관계들을 창출하기 위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런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민주주의 학습은 공허하고 비현실적인 것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 집합적 존재로서 시민: 시민사회

우리가 시민이라고 부를 때 한 사람의 시민을 일컬을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집합명사로서 시민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시민은 진공상태에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고유한 공간 안에서 존재합니다. 가수나 배우에게 무대가 있듯, 시민들의 사회적 활동에도 무대가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시민사회라고 부릅니다. 시민사

## <그림> 국가, 시장, 시민사회



회는 때로 그냥 사회라고 불리기도 하고, 우리의 생활공간과 가까운 것은 지역사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민주주의의 목적은 추상적 개념을 구체적 일상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각자 자신의 문제를 사회적으로 만드는 과정이 중요하다.”<sup>10</sup>

앞서 시민에 관해 사유할 때 관계 속의 시민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는데, 사회란 다양한 관계들이 켜켜이 쌓이고 얽혀서 구성되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시민들은 민주주의를 매개로 자신의 사적인 문제를 혼자 끄꿍 앓기보다는 사회라는 동료 시민들의 관계망으로 끌고 나와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개인 간의 같

10 허승우, 《공공성》, 책세상, 2014.

등을 마을 속 관계로 끌고 나와서 해결하는 이웃분쟁조정, 살아가면서 크게 다치거나 아파서 큰 돈이 들어갈 수 있는 위험에 대한 대비를 일종의 ‘공동구매’로 해결하는 의료보험, 노인을 돌보거나 아이들의 교육문제를 함께 논의하는 일이 그 예가 될 것입니다.

시민사회는 특별히 시민들이 공동의 문제에 함께 대응하고, 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것과 관련된 공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흔히 한 사회는 국가, 시장, 시민사회라는 커다란 3개의 톱니바퀴로 구성돼 있다고들 합니다. 다시 국가라는 톱니바퀴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지방정부와 같은 공공기관들로 구성되고, 시장이라는 톱니바퀴는 기업들로 구성됩니다. 그리고 시민사회는 시민사회단체, 자원봉사 활동, 마을사람들의 모임 등으로 구성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각 톱니바퀴가 서로 다른 원리에 의해 작동된다는 점입니다. 시장이라는 톱니바퀴는 ‘교환’의 원리가 작동합니다. 무언가를 얻었다면 그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거래 관계입니다. 우리는 이 원리를 통해 입고, 먹고, 마시며 일상적인 필요를 충족하며 살아갑니다. 국가라는 톱니바퀴는 ‘재분배’의 원리가 작동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세금을 많이 내고 적게 버는 사람은 세금을 적게 내지만, 그 세금으로 운영되는 군대가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건 적게 버는 사람이건 똑같이 지켜주는 것입니다.<sup>11</sup>

---

11 국가, 시장, 시민사회의 작동원리를 각각 재분배, 교환, 호혜로 설명하는 것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 칼 폴라니, 홍기빈 옮김, 《거대한 전환》, 2009, 길.

한편 시민사회는 전혀 다른 원리로 작동됩니다. 시민사회가 작동하는 핵심적인 원리는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바로 ‘호혜’와 ‘자율’입니다. 호혜는 서로 혜택을 베푼다는 뜻입니다. 돈과 권력을 많이 지니지 못한 평범한 사람들<sup>民</sup>이 공동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서로 돕고 힘을 합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정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율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닌, 그리고 돈을 벌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스스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민사회는 시민운동, 자원봉사, 마을만들기, 사회적 경제, 사회복지 등 ‘호혜’와 ‘자율’의 원리에 기반해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시민들의 다양한 활동들이 살아 숨 쉬는 일종의 생태계라 할 수 있습니다. 호혜와 자율의 원리는 자유와 평등과 함께 프랑스 혁명에서 주창된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 중 하나인 박애<sup>fraternity</sup>와 관련이 있습니다. 흔히 박애 하면 자선<sup>philantrophy</sup>을 떠올리게 되는데, 의미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박애는 형제애<sup>brotherly love</sup>나 자매애<sup>sisterhood</sup> 또는 우애<sup>友愛</sup>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자선이 도움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간의 일방향적 관계에 초점을 둔다면, 박애는 서로 돕는, 즉 쌍방향의 관계를 전제합니다. 즉 내가 동료시민을 도우면 언젠가 나도 동료시민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것이며, 내가 아니라도 나의 친구, 나의 가족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에 기초한 것입니다.

## 교육 >>

### 시민은 교육과 참여로 만들어 진다

앞서 우리는 좋은 시민 없이 좋은 민주주의가 없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좋은 시민이 저절로 생겨나지는 않습니다. “시민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는 토크빌의 말은 이런 점을 잘 나타내 줍니다. 민주주의를 운영하고, 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 갈 좋은 시민들이 만들어지기 위해 다양한 노력들이 이루어 지는데, 가장 기본적인 노력이 바로 민주주의 학습입니다.

“민주주의는 모든 세대마다 새로 태어나야 하며, 교육은 이를 위한 산파다”<sup>12</sup>

앞서 살펴본 서구 국가들에서도 좋은 시민의 성장을 위해 부단히 민주주의 학습을 하고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인데, 특히 최근 들어 중앙 및 지방정부들이 시민들의 민주주의 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따로 자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는 초·중·고등학교를 통해 12년의 긴 공교육 과정을 거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대학교육을 받지만, 입시위주의 경쟁적 교육체제 속에 민

12 존 듀이, 김성숙·이귀학 옮김, 《민주주의와 교육: 철학의 개조》, 동서문화사, 2016.

주주의에 대해 이해하고 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 교육기본법 제2조(교육이념)

교육은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陶冶)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人類共榮)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교육기본법은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교육의 근본에 관한 법률입니다. 여기서는 모든 교육의 근본적인 목적을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인격의 도야입니다. 모든 사람은 세상에 하나 뿐인 고유성을 지닌 존재로 자신의 인격을 형성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둘째 자주적 생활능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물학적·사회적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능력들을 갖추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추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 모두 현재 우리의 교육이 충분히 다루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기 위한 교육은 오랜 시간 동안 금기시 되거나 소홀히 여겨져 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인격과 자주적 생활능력, 그리고 민주시민의 자질은 내용적으로 서로 구분될 수 있지만, 현실에서는 분리되지 않고 융합돼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납니다.

## 지식 · 태도 · 역량간 균형과 확장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는 설득의 원천을 이성(logos), 감정(pathos), 윤리(ethos)로 나누는가 하면, 고대로부터 전해오는 성격유형론인 에니어그램(enneagram)은 사람이 지닌 에너지의 중심을 머리, 가슴, 몸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이런 통찰은 교육의 요소에도 이어지는데, 사람들은 흔히 교육의 세 가지 요소를 지식·정보, 가치관·태도, 기술·역량으로 나누곤 합니다. 지식·정보는 모르던 것을 인식하거나, 우리가 무의식 중에 반복하는 행동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것과 관련된 것으로 흔히 의식화(consciousness raising)와 관련이 있습니다. 가치관·태도는 타인과 사회에 관해 이해하고 인식의 결정적인 변화나 행동으로 이끄는 힘인 감수성(sensitivity)과 관련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술·역량은 알고 느낀 후 무언가를 행동에 옮기는데 필요한 역량강화(empowerment)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민주주의 학습 하면 가장 많이 떠올리고, 실제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교육은 지식·정보의 전달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간 여러 민주주의 학습 주체들의 실험과 노력으로 가치관·태도나 기술·역량의 요소에 중점을 둔 교육의 내용과 형식도 개발돼 왔습니다. 교육을 이루는 세 가지 요소와 관련해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요소간의 균형에 관한 부분입니다. 물론 세 가지 요소가 삼분의 일씩 균등하게 혼합된 교육이 반드시 좋은 교육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이라는 것은 머리만으

로, 가슴만으로, 혹은 손과 발만으로 삶을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요소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세 가지 요소 중 어느 한 가지를 강조한 실천들이 이루어질 수는 있지만, 시민들에게 민주주의 학습이 제공될 때는 이 세 가지 요소의 균형을 생각할 때 좀 더 효과적이고 만족스러운 교육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상태가 균형을 이룬 것인가? 그것은 전적으로 교육을 만드는 사람과 참여하는 사람들이 바라는 것과 그들을 둘러싼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한 가지 더 교육과 관련해 짚어보고 싶은 것은 교육의 의미가 확장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육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강의장이라는 공간에서 강사와 학습자의 관계와 체계화된 과정을 통해 배움이 일어나는 것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민주주의 학습은 이런 전통적인 교육의 형태들 외에도 다양한 형태들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정형화된 강좌형태에서 삶의 과정이나 작업의 과정을 통해 배움을 얻는 무정형의 교육 형태들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통적인 교육이 교육을 만드는 사람이 모든 것을 준비하던 것에서, 교육의 기획과 진행에 학습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형태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아가 기획자나 강사 없이 학습자들이 모여서 자율적으로 학습하는 학습동아리도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예술감상이나 작업, 여행이나 답사, 캠프, 상담이나 컨설팅 등 전통적으로 교육이라 인식되지 않는 다양한 방식들이 자주 활용되고 있습니다. 물론 교육의 형태가 무조건 다양

화 되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 학습자들이 효과적이고 만족스럽게 배울 수 있다면 교육형태의 다양화를 적극적으로 사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시민 · 콘텐츠의 연결과 융합

최근 들어 많은 지역에서 민주주의 학습이 제도화되고 활성화 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학습이 올바르게 자리 잡기 위해서는 민주주의 학습을 이끌고 있는 다양한 주체들이 뜻과 힘을 모을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우리는 한국에 다양한 민주주의 학습의 내용과 주체들이 분화·발전해 왔음을 살펴본 바 있습니다. 한국의 민주주의 학습계가 그 자체로 지속가능한 하나의 생태계로 진화하려면 분화는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분화가 민주주의 학습의 영역과 주체간의 소통이 단절된 분절화나 비생산적인 경쟁이나 갈등이 나타나는 분열로 흐르는 경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중앙 및 지방정부가 민주주의 학습 관련 정책을 올바르게 펼치도록 견제할 힘을 약화시키고, 시민사회의 민주주의 학습 역량을 키우는데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오래 전부터 다양한 주체들이 다양한 민주주의 학습의 흐름들을 형성해 왔습니다. 시민들의 욕구에 부응하는 민주주의 학습을 위해, 그리고 향후 지속가능한 민주주의 학습을

위해 우리는 그간 쌓아온 민주주의 학습의 전통과 경험을 밑거름으로 삼을 필요가 있습니다. 민주주의 학습은 어느 순간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민주주의 학습 주체들이 쌓아온 역사성을 딛고 서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다양한 민주주의 학습의 영역과 주체들이 서로 연결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경험과 내용이 서로 융합되어야 합니다. 민주주의 학습을 추상적인 수준에서 정치교육과 인권교육, 양성평등교육으로 나눌 수 있지만, 민주주의와 관련한 시민들의 삶에서 이런 문제들은 융합되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각 영역의 민주주의 학습 주체들은 각자 자신의 교육활동에 전념하느라 바빠서 서로 만나고 연결될 기회가 부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가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가 공유되지 못하고, 중복투자나 의도하지 않은 비생산적 경쟁과 같은 부작용들이 나타났습니다. 민주주의 학습은 최근에 갑작스레 나타난 무엇이기보다는, 오래 전부터 이어져 온 노력이 지금의 상황에 따라 재창조된 것입니다.

“우리는 연결될수록 강해진다.”

또한 민주주의 학습은 신설돼야 할 무엇이라기보다는 교육을 통해 사회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다양한 노력들에 민주주의의 내용과 실천을 붙여 넣는 것에 가까울 것입니다. 다행히도 민주주

의 학습 주체들이 서로 연결되고 협력하려는 노력 역시 면면이 이어져 왔고, 최근 들어 민주주의 학습이 사회적으로 공론화되고 활성화되는 흐름 속에 민주주의 학습 주체들이 모이고 결속하려는 노력도 다시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민주주의 학습의 주체들이 모이고 연결된 네트워크는 한국 민주주의 학습의 공유된 상(像)과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 학습을 어떻게 다룰지를 논의하는 공론의 장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제3장

## 민주주의 실천 기술





2016년 12월 9일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가결’에서 부터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박근혜 파면’선고에 이르는 과정은 대의제 민주주의의 자연스러운 제도만 작동했던 것은 아닙니다. 2016년 10월29일 본격적으로 시작하여 파면선고 다음날까지 있었던 총 20차례의 촛불집회를 통해 전국적으로 1백만 명의 시민 참여가 만들어 낸 역사적 사건입니다. 당시 ‘이게 나라냐?’라고 사람들이 외쳤을 때, 정작 우리는 어떤 나라를 바라던 것이었을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권력자 ‘소수를 위한 나라’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살기 좋은 나라’이기를 바라는 공통된 바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누군가, 특히 우리가 민주주의 제도 과정에 참여하여 (투표로) 위임한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질 거라는 기대가 아닌 적극적으로 참여 하는 시민 민주주의자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모두가 함께 살기 좋은 나라. 그런 사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광장에 나섰을 때, 우리가 직접 참여하고 실천 할 때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값진 경험을 하였습니다.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비판적이고 참여하는 시민’이 되어간다는 것은 어렵거나 먼 곳에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아니다’ 느낀 모두가, 삶 속에서 관심 있는 어떤 일에 목소리를 내거나 사소한 행동을 하는 것이 바로 값진 경험을 가져다 주었고 이 경험이 우리의 일상을 변화시켜 줄 수 있는 생활 속 민주주의 학습의 기회를 열어 준 것입니다.

이번 장에서는 조금 더 나은 사회를 꿈꾸고 상상하는 사람들이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소개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생겨나는 개인간의 私的(사적)문제가 아닌 공공/기업과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대상별로 정부, 지자체, 기업 등에 따라 문제들을 해결 하는 데에 이미 제도적으로 활용 가능하도록 정책화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제기하다’, ‘주인 되다’, ‘감시하다’로 나누어 살펴보았습니다.

**제기하다:** 다른 사람이나 우리 사회에 관심을 가진다는 것은 무엇인가 낚새를 알아차리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더 나은 사회를 꿈꾼다는 것은 누군가의 불편함을 알아차리고, 잘못을 지나치지 않고 말하고, 애써 말하는 그의 편에 서주는 것이 아닐까요?

**주인되다:** 주인이라서 일을 좀 덜고자 다른 사람에게 맡기기도 하지만, 아무래도 직접 손 견어붙이고 일을 맡아 해봐야 다른 사람을 잘 시킬 수도 있습니다. 가까운 작은 단위에서부터 손 견어붙이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감사하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주인이라면 마땅히, 가장 먼저 하는 일을 맡은 사람이 ‘잘 하나?’ 보는 일이겠지요.

어떤 사례는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봐야 할 것도 있습니다. ‘알아보기’로 관련 정보를 정리하고, 직접 참여하고 싶다면 더 알아볼 수 있도록 관련 기관이나 단체를 ‘실천하기’에서 소개했습니다.

직접 참여가 만들어 내었던 광장에서의 민주주의가 일상의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마음의 촛불을 드는 시민, 우리의 일상을 모두를 위한 공동체로 변화시키는 실천의 과정에 초대합니다.

# 1. 제기하다

## 1) 정보공개청구

### 알아보기<sup>13</sup>

정보공개청구제도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업무 수행 중 생산·접수하여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법은 크게 정보공개청구와 정보공개청구가 없더라도 공공기관에서 사전에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정기 및 수시 공표 목록을 작성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후자는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주로 공공기관에서 자발적으로 공개하는 자료들입니다. 정보공개청구는 시민들

13 정보공개제도 : 1996년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제정·공포하고,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

청구방법 : ①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에서 청구서 작성 ② 접수 및 소관기관 이송 ③ 공개여부 결정(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1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가능) ④ 정보공개(공개일시·공개장소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정보내용에 따라 수수료 발생할 수 있음)<<https://www.open.go.kr>>

이 요구하는 행정정보의 공개에 관한 제도입니다.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은 국가기관(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해당기관에 직접청구),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 및 그 소속 기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한 공공기관 등입니다.

### 실천하기

시민의 질문에 국가와 공공기관은 답해야 합니다. 하지만 정보공개청구는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긴 하나 개인이 정보공개청구 할 경우 정보내용 및 목적에 따라 공개를 제한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 정보공개청구 활동을 하고 있는 시민 단체의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 <http://www.opengirok.or.kr>

어렵지 않으려고 애 쓴 정보공개청구 가이드북

: <http://www.opengirok.or.kr>

이거리를바꾸자 : <http://fixmystreet.kr>

## 사례

- 정보공개청구 :

① 2015년 경실련,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업체별 GMO 수입현황 등 정보공개 청구

**결과)** 경실련의 업체별 수입현황 정보 공개 청구에 대하여 업체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3년 연속 거부에 대하여 행정소송 제기-승소, GMO표시제 도입으로 전환 가능성 높임.

② 2018년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시민참여 알권리 감시단

- 서울 25개 기초의회 업무추진비 정보공개 청구 및 내역 분석

**결과)** 국민 세금을 규정에 맞게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심각한 도덕불감증 확인

- 50만원 이상 업무추진비 지출 경우 상대방의 소속과 성명 기재 증빙서류<sup>14</sup>를 남겨야하지만 은평구 단 한곳에 불과

- 강남구의회 의장단 총31회 한 식당에서 업무추진비 사용, 이 가게는 강남구의회 양\*\*의원이 운영하는 사업장.

- 마포구 한\*\*의원의 경우 총3회 본인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사용 / 총 9회 본인의 아들 운영 가게에서 사용

14 투명공개 사례:옥천군의회 매달 홈페이지에 집행목적, 집행구분, 집행대상과 그 원인 등을 먼저 공개.



**시민참여 방법** :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는 시민참여를 통한 감시 및 분석 등의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알권리 감시단 모집하여, 정보공개 청구 방법과 내역 분석, 시민홍보, 정책제안 등의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알권리감시단’ 알아두기.

## 2) 주민감사청구

### 알아보기

주민감사청구란 1999년부터 시행된 제도(지방자치법 제16조 1항에 근거), 19세 이상의 주민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행위가 위법하거나 공익을 현저하게 저해한다고 판단될 때, 조례로 정한 일정 수 이상의 주민서명으로 직접 감사를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중앙정부기관에 대한 주민감사청구는 크게 ‘국민감사청구’<sup>15</sup>와 ‘공익감사청구’<sup>16</sup>로 구분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민감사청구도 가능합니다.

15 국민감사청구: ‘부패방지 및 국민권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2조’를 근거로 공공기관의 사무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19세 이상의 국민 300명 이상의 연서로 감사원에 청구하면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에서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그에 따라 감사원에서 감사실시 후 그 결과를 통보하는 제도

16 공익감사청구: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처리에 관한 규정(감사원 훈령)’에 근거하여 19세 이상 300명 이상의 국민, 시민단체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익을 목적으로 특정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청구하면 이를 심사하여 감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감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하는 제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주민감사청구는 광역자치단체나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에 대해서는 300명의 연서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외 기초자치단체에 대해서는 200명 이내에서 각 자치단체 조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광역자치단체에 대한 주민감사청구는 관련 주무부 장관에게 청구하고, 기초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관할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청구합니다. 즉, 감사청구 대상의 상급자치단체 또는 정부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 실천하기

주민감사청구는 요건에서도 알 수 있듯이 혼자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제도는 아닙니다. 주민참여제도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제도의 문턱이 높다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여럿이 함께 모이면 시민의 권리를 행사 할 수 있습니다.

주민감사청구와 함께 실행가능한 제도로는 ‘주민소송’도 있습니다. 주민소송은 주민감사청구가 진행된 후 그 감사결과에 승복하지 못할 경우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주민감사청구라는 절차를 이미 거쳤기 때문에 소송은 혼자서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 ‘자치단체의 위법한 재무회계 행위’로 규정돼 있습니다. 실제 일반 주민들이 재무회계상의 위법성을 잘 알기 힘들다는 점을 고려하면, 쉬운 참여 방법이라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도움을 주는 시민단체도 있습니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http://www.peoplepower21.org/Government>  
주민소송사용설명서 : 예산감시네트워크 주민참여법률지원단 발간.

## 사례

- 주민감사청구 :

① 주민감사청구 첫 사례\_2001년 서울 송파구 주민 769명 감사청구

**원인** 당시 송파구청장 내외와 구의원4인, 공무원4인 등 9박10일간 뉴질랜드의 자매도시 방문시 온천관광, 카지노 등 방문

**과정** 지역 5개시민단체 ‘송파구뉴질랜드카지노온천관광시민대책위’결성, 송파구 주민 769명의 서명을 받아 서울시에 감사청구(예산내역공개, 공익부합여부 및 공식행사 외 관광성여행의혹)

**결과** 관련 공무원 3명 문책, 관광성공무국외여행 지양지시

② 2014년 4월8일 서울 은평구 주민 269명 서울시에 감사청구

**원인** 은평구의회 해외시찰 불투명한 보고

**과정** 은평구 주민 269명 서명, 서울시에 감사청구(예산집행과 결산내역공개)

**결과** 행정상 조치 6건(시정1, 주의3, 권고2), 신분상 조치 5건(주의5)

 **시민참여 방법** : 주민감사청구를 위한 사안에 동의한다면  
서명하기, 이웃에게 권하기, 주민 홍보 하기 등

### 3) 집단소송제도

#### 알아보기

집단소송제이란 같은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집단으로 소송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로 피해자의 수가 많고 피해규모가 소액이라 개개인이 소송을 제기하기 어려울 때 사용합니다. 한 명이나 두세 명의 대표당사자가 전체 피해자를 대표해 소송을 제기한다고 해서 집단소송을 ‘대표당사자 소송’이라고도 하고, 다수 개인들이 원고가 된다는 점에서 특정 단체가 원고가 되는 소송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5년경 증권 분야에 한해 집단소송이 도입되었으나 지금은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피해, 부정입학으로 인한 피해, 먹거리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는 소비자운동의 방법입니다.

일반 민사소송과 달리 집단소송의 결과는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피해자는 ‘제외신고’를 하지 않는 한, 소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아도 판결에 따라 배상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천하기

지금까지 가습기살균제 참사,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반복되는 가격담합, 폭스바겐 연비조작, 살충제 계란, 발암물질 생리대, BMW폭발사고 등 집단 소비자피해가 증가하고 있고, 그 피해규모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집단소송을 통해 집단의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하고 분쟁 해결의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이며, 기업 소비자 분야 뿐 만 아니라 노동, 공정거래 분야 등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경찰연(KT 개인정보유출 집단소송 등) : [www.ccej.or.kr](http://www.ccej.or.kr)

카드사 개인유출 집단소송 : <http://cafe.naver.com/creditcardinfo>

## 사례

### - 집단소송제도

① 2017년 7월 도이치뱅크(ELS종가조작혐의) 상대 투자자들  
집단소송

**원인** 2007년8월 도이치은행 발행 한국투자증권 판매 ‘한투 289ELS’란 이름의 주가연계증권은 모두 198억여원어치가 팔렸지만 2009년 8월 계약만기일 종료직전 기초자산을 낮은 가격에 대량 매도하며 주가를 끌어내리는 시세조종을 하면서

투자자 손실 발생하자 투자자들이 '증권집단소송'제기  
**결과** 최종 승소 판결로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투자자를 포함  
해 모두 464명이 120억원 나눠받게됨

② 2013년 KT홈페이지 해킹 1170만여건의 고객 개인정보 유  
출에 대한 집단소송

**원인** 2013년 KT홈페이지 해킹으로 개인이름, 주민등록번호 유  
출, 피해자 2만8천여명 KT상대 경실련 대리 집단소송제기

**결과** KT가 소송참가 피해자들에게 1인당 10만원씩 배상판결.

 **시민참여 방법** : 증권 집단 소송은 '투자자'에 한합니다. 투  
자자들은 소송 대리인을 지정하여(법률적 도움 필요) 소송에  
참여하기.

기업감시 시민단체의 집단소송인 모집에 참여하기.

#### 4) 공익제보

##### 알아보기<sup>17</sup>

한 조직의 구성원이 조직 내부의 부정과 비리를 외부에 알림으  
로써, 공공의 안전과 권익을 지키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호하는 행

17 [네이버 지식백과] 공익제보 [whistleblowing] (한경 경제용어사전,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

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공익제보 whistle-blowing란 말은 영국 경찰관이 호루라기를 불어 시민의 위법행위와 동료의 비리를 경계하던 것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따라서 공익제보자 whistle-blower는 공익을 위해 용기 있게 정의의 호루라기를 부는 사람을 말합니다.

공익제보 이후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공익신고자보호법 公益申告者保護法은 공익 침해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신고자를 누설할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기업, 단체의 공익침해행위를 행정기관 등에 신고해 해고 등 불이익조치를 당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원상회복 등 신분보장을 받게 되며, 2011년 3월 29일 공포되었습니다.

## 실천하기

공익제보의 신고접수기관은 ①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기관, 단체, 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② 소관 행정·감독기관,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국회의원 ③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공단 등 공공단체 등에서 할 수 있습니다.

공익제보자를 지원하는 시민단체들이 있습니다. 공익제보 게시판을 운영하거나 공익제보자 생계지원 등 다양한 활동 등을 지

원합니다.

호루라기재단 : <http://www.horuragi.or.kr>

한국투명성기구 : <http://www.ti.or.kr/xe>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http://www.peoplepower21.org/Whistleblower>

홍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www.cleankorea.net](http://www.cleankorea.net)

아름다운재단 어쩌다슈퍼맨 캠페인 : <https://beautifulfund.org/superman>

## 사례

### - 공익제보<sup>18</sup>

2009년 김영수 소령 9억4천여만원 군납비리 제보

**내용)** 2006년 계룡대 근무지원과장으로 부임한 김영수 소령은 간부들이 가구용 전자제품 구매시 특정업체들과 정상가격보다 40%이상의 고단가 수의계약을 맺조 위조견적서를 이용해 수억의 국고 손실 초래 사실 해군 헌병대에 신고 - 헌병대 확인불가능으로 수사종결 - 2006년 김소령 타부서 전출 -

18 대표적인 공익제보 사례: 1990년 보안사의 민간인 불법 사찰 기록을 공개했던 윤석양 이병, 감사원과 재벌의 유착 비리를 고발했던 이문옥 감사관, 1992년 군 부제자 투표의 부정을 고발한 이지문 중위, 14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당이 단체장을 통해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한준수 연기군수, 2000년 인천 국제 공항 터미널 부실 시공을 폭로한 정태원 감리원, 4대강 사업 연구 용역에 대한 부적절한 압력을 고발한 김이태 박사, 군 납품 비리를 고발한 김영수 소령 등(참조 : 2017 참여연대 출간, 양심의 호루라기를 부는 사람들)

2007년2월 국가청렴위원회에 다시 제보

**결과)** 국가청렴위원회 국고손실 확인, 국방부 조사본부 9억 4천여만원의 국고 손실 확인, 불법행위 관련자 16명 징계하 리고 해군에 통보 - 하지만 해군은 관련자 징계하지 않음 - 2009년 참여연대와 김영수소령, 대전지검에 관련자 고발 - 대전지검 무혐의 처분 - 10월 김영수소령 MBC PD수첩에 출 연 사실 공개 - 국방부 특별조사단 재조사 실시 - 2009년 12 월 비위 및 수사방해 혐의로 군인 등 31명 사법처리 발표.

## 5) 불매운동

### 알아보기

불매운동(不買運動, boycott)은 항의의 수단으로 항의 대상과의 거래 를 끊거나 항의 대상과 관련한 상품의 구매·사용을 중단하거나 배척하는 자발적인 소비자 활동입니다. Boycott은 1870년대 말 아일랜드에서 토지관리인 퇴역 육군대위 보이콧(Charles Cunningham Boycott, 1832~1897)의 악정에 대해 소작인이 조직적으로 보이콧의 우편 물을 가로채고, 식량도 가로채며, 부리던 직원들도 모두 떠나는 등 보이콧대위와의 접촉을 모두 거절한 것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우 리 나라에서는 최근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으로 인해 옥시제폼 에 대한 불매운동에 전국적으로 많은 소비자들의 동참했습니다.

## 실천하기

보통 저항운동은 정부나 권력기관을 향하는 경우가 많은데, 불매운동은 경제주체인 기업을 향하는 활동입니다. 기업의 잘못된 제품·서비스 생산이나, 부도덕한 행위, 혹은 시민사회의 가치에 반하는 경우 소비자들이 나서서 해당 기업의 제품을 구매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보이고, 동료시민들에게도 행동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기도 합니다. 이를 통해 해당 기업의 태도에 변화를 이끌어 내고자 합니다.

## 사례

현재 진행형인 가습기살균제피해자 구제 및 옥시불매운동  
- 2001년 가습기 살균제 제품 출시, 2011년 4월부터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손상 원인 추정 사망사건 발행, 2011년 역학조사결과 옥시에 첨가된 PHMG(폴리헥사메틸렌구아디닌) 인산염과 PGH(염화에톡시에틸구아디닌)의 독성으로 인한 가습기 살균제 위해성 확인됐다며 수거, 질병관리본부 사용자 제 권고, 2012년 가족모임과 환경보건시민센터는 국가와 제조, 판매업체 상대 첫 손해배상 소송제기, 공정거래위원회 옥시와 흠플러스 등 4곳에 과징금 5200만원 부과에 불과한 처벌, 2012년 8월 유족 8명이 옥시 상대 과실치사 혐의 검찰 고

발, 2013년 기소중지결정, 2013년 정부 가슴기살균제 피해자 조사 공식 피해자로 221명(이중 95명은 사망피해자로 분류), 2016년 검찰 전담수사팀 구성, 국민적 공분 속에 옥시 불매운동 전개 .

- 2017년 ‘가슴기살균제피해구제를위한특별법’시행, 2018년 9월 현재 환경부가슴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에 의한 피해 현황 : 폐질환 피해구제 조사 판정자 5253명 중 사망자는 1233명, 생존자 4020명, 천식피해 3785명 중 사망자 919명, 생존자 2866명, 태아피해 총 52명 중 사망자 18명, 생존자 34명.

- 가슴기살균제피해지원종합포털 운영 : [www.healthrelief.or.kr](http://www.healthrelief.or.kr)

## 2. 주인되다

### 1) 주민자치위원회

#### 알아보기

주민자치위원회는 1998년 읍면동 행정기능 전환을 통해 추진되었습니다.<sup>19</sup> 1998년에는 경제위기 직후라 작은 정부로 개혁을 추진하였고 그 과정에서 기존 읍·면·동 사무소의 기능을 자치단체로 이관하는 방향으로 이뤄졌습니다. 이에 읍·면·동 사무소의 여윌공간을 주민들의 자치활동을 위한 것으로 활용하고자 자치구별 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가 있고, 이 조례에 근거하여 주민자치위원회를 둡니다.

주민의 대표기구라기 보다 읍/면/동의 심의 자문기구로서의 역할이 부여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는 지역공동체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해 왔습니

---

19 통반장과 주민자치위원회 제도의 혁신방안, 2014, 서울연구원

다. 최근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복지사각지대 6만 5천여 가구 대상 찾아가는동주민센터 사업들이 주민 참여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찾아가는동주민센터(이하 찾동)는 전체 424개 행정동 중 80%에 해당하는 342개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민 민원 통합기능은 물론 찾아가는 복지-건강, 지역의제 연결 마을 공동체, 행정혁신 등 복합기능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 실천하기

해당 지역에 거주하거나, 해당 지역에 직장을 둔 사람이면 주민자치위원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지역의 동장은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시기가 되면 주민자치위원 모집에 관해 공지를 해야 합니다. 주민자치위원의 역할은 자치단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에 관해 심의하고 의결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 기획과 주민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활동들을 수행하게 됩니다. 주민자치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입니다.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보상이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서울시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대체하는 정책이 시범사업 중입니다. 새로이 구성된(될) 주민자치회는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에 비해 그 권한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따라서 주민자치회에 참여하는 방법도 기존과 달리 보다 개방적으로 변했습니다. 현재 시범실시는 주민자치회 위원을 50

명 이내로, 60% 이상을 공개모집-공개추첨 방식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덧붙여, 중앙정부에서도 2017년 말 주민자치위원회를 대체하는 주민자치회 구성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서울시와 마찬가지로 그 권한을 대폭 강화하고, 공개모집과 공개추첨을 통해 구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2)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 알아보기

아파트 숲이라고 할 만큼 도시는 아파트로 가득합니다. 주거형태가 주택에서 아파트로 전환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그러다 보니 공동주택 안에서 다양한 문제와 갈등들이 발생합니다. 투명한 공동주택을 만들어가기 위한 기구가 입주자대표회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입주자로 구성됩니다. 최근 입주자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을 공개적이고 민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건들이 강화되었습니다. 어느 지역의 경우 후보자들이 공약을 입주자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기도 하고 직접 홍보전단을 나눠주며 선거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몇몇 이해관계자들만의 아파트가 아니라 공동의 문제를 해결해 가는 대표자로서의 역할을 부여하고 있는 과정이라 하겠

습니다.

## 실천하기

입주자대표회의는 각 동 대표들로 구성됩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 등의 대표가 돼 관리비 예산확정과 공동주택 단지 내 시설물의 유지 및 운영 등에 관한 관리주체의 집행업무를 결정하고 감사하는 역할<sup>20</sup>을 합니다. 입주자대표는 해당 아파트단지 안에서 거주하는 사람이 될 수 있고, 임기는 2년이며 한 차례 더 선출 될 수 있습니다.

## 3) 학교운영위원회

### 알아보기

학교운영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 설치근거에 따라, 학교운영에 대한 많은 결정들을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진행함으로써 학교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강화하는 제도입니다. 1995년 시범적으로

---

20 1. 관리규약 개정안의 제안, 규약이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들 2. 아파트 관리방법의 제안 3. 공용시설물의 이용료부과기준의 결정 4. 단지안의 전기·도로·상수도·주차장·가스설비·냉난방설비 및 승강기 등의 유지·운영 기준 5. 자치관리를 하는 경우 자치관리기구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아파트 공용부분의 보수·교체 및 개량 7. 주민공동시설 위탁 운영의 제안 8.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 등의 주민공동시설 이용에 대한 허용 제안 9. 장기수선계획 및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조정(비용지출이 따르는 경우) 10. 입주자 등 상호 간에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의 조정 11.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및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아파트의 관리와 관련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사항

실시하여 2000년부터는 전국의 모든 학교에 의무적으로 설치하였고, 학교 내 중요한 자치기구가 되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은 해당 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학부모, 해당학교 교사, 학부모나 교사는 아니지만 해당학교 운영에 기여하고자 하는 지역주민입니다. 최근에는 학생대표가 참여하는 학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학생도 학교의 중요한 구성원으로서 인정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및 구성비율은 학생수와 학교규모를 고려하여 정<sup>21</sup>하고, 세부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합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58조에 따른 정수와 구성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학교운영위원이 되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학교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국공립학교) 및 자문(사립학교)합니다. 그리고 학교장이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 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거나 심의 자문한 사항임에도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시행한 경우, 보고요구권을 행사 할 수 있습니다.

## 실천하기

민주적이고 투명한 학교운영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학교

---

21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정수 및 구성비율 : 학생 200명 미만:5~8명, 200~1천명미만:9~12명, 1천명 이상:13~15명 / 일반학교 학부모 위원 40~50%, 교원위원 30~40%, 지역위원 10~30%/특성화고 학부모 위원 30~40%, 교원위원 20~30%, 지역위원 30~50%

운영위원회는 선출방법이 완전한 개방제는 아닙니다만 학부모, 교사,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학부모위원회는 학부모 전체 회의에서 직접 선출하며, 교원위원회는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합니다(단, 사립학교는 교직원 추천자중 학교장 위촉). 지역위원회는 학부모위원회 또는 교원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 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합니다. 학교 구성원, 모두에게 더 나은 공동체로 만들기 위한 관점이 중요한 실천 활동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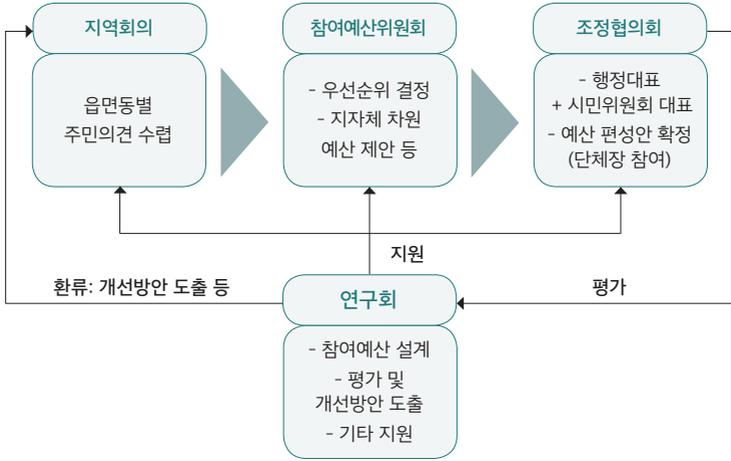
#### 4) 주민참여예산제

##### 알아보기<sup>22</sup>

주민참여예산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과정에 주민들이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참여예산제의 시초는 시민운동 차원의 예산감시운동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2011년 국가재정법의 개정으로 예산과정의 국민참여가 의무화되었는데 시작은 1990년대 중반 시민단체의 예산감시활동으로 시작(청주, 원주 등)되었습니다. 2003년 광주 북구의 조례제정을 시작으로 243개 지자체로 확산되었습니다. 참여예산

---

22 이호, 《주민참여예산제의 이해와 활성화 방안》, 2016



에는 예산편성단계에서의 참여(협의적)와 예산과정 모든 단계에서의 주민참여(광의적)가 있는데 지역주민들의 참여 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실천하기

우리 동네에 꼭 필요한 예산 편성에 참여하고 싶다면, 필요한 예산 사업을 제안하거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 5) 주민발의 · 주민투표 · 주민소환제

### 알아보기

주민발의제와 주민투표, 주민소환제는 법으로 규정된 대표적인 주민참여제도입니다.

주민참여제도	시행일	근거 법	참여 내용
주민발의제	2000년 3월	지방자치법 제15조	조례 제·개정 및 폐지 청구
주민투표제	2004년 7월	주민투표법	주민들이 투표 통해 직접 결정
주민소환제	2007년 7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소환 청구

주민발의제도는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의 법인 조례를 새로이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하는 제도입니다. 주민들이 원하지만, 지방의회에서 관련 조례를 만들거나 개정 또는 폐지시켜주지 않을 때, 주민들이 직접 나서서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요건은 일정 수 이상의 유권자 서명을 받는 것입니다. 광역자치단체와 인구 50만 이상의 자치단체에서는 총 유권자의 1/100 이상 1/70 이하의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그 외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유권자의 1/50 이상 1/20 이하 범위에서 조례로 규정한 수만큼의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 사례

### - 주민발의

① 2017년 12월, 하동참여자치연대, 조례 주민발의

**내용)** 주민1816명(법적요건870명)은 친환경학교급식지원에 관한조례, 방사능 등 급식안전에관한조례 2건을 하동군의회에 발의

**결과)** 2018년 3월 하동군의회 각하결정

② 2003년 성남시립의료원 설립을 위한 주민발의

**내용)** 2003년 종합병원 2곳 폐업으로 공공의료 확장 필요성 대두, 2005년 시민 1만 6천여명 서명 '성남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발의

**결과)** 2013년 성남시의료원 기공, 우리나라 최초 시민 발의에 의한 공공병원 2019년 개원 예정.

주민투표는 주민들 자신 직접 결정하고자 하는 사안에 대해 일정한 요건을 거쳐 신청해, 투표를 통해 직접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주민투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도 청구할 수 있는데, 실질적인 주민참여제도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민들이 청구한 주민투표제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한 청구요건은 해당 지역 유권자의 1/20 이상 1/5 이하 범위에서 조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사례

### - 주민투표제도

2011년 8월, 서울시 무상급식 전면 실시 여부 주민투표 실시  
**내용)** 2010년 무상급식 조례안 서울시의회 통과, -2011년 서울시 예산 20조6천억중 무상급식 예산 695억원 신설, 반면, 서해벚길 한강 예술 섬 사업 등 오세훈시장 사업예산 전액삭감-  
서울시 2011년 2월8일 ‘복지포플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 3인에게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180일 동안 서울지역 청구권자 총수 5%인 41만8천명의 서명 작업 시작-2011년 6월16일 대략 80만명으로 무상급식 주민투표 청구서 제출, 이중 67%(대략55만명) 유효 서명인정  
8월1일 주민투표발의,8월24일 주민투표일로 확정  
**결과)** 총선거인수 8,387,278만명/총투표자수 2,157,744명/투표율 25.7%/개표불가로 무효, 8월26일 오세훈시장 사퇴<sup>23</sup>

주민소환제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들에 대해 그 직에서 해임시킬 수 있는 제도입니다. 주민소환제는 일정한 청구요건을 거쳐 청구가 접수되면, 주민투표를 통해 최종적으로 소환 여부가 결정됩니다. 청구요건은 광역자치단체장

23 2011년8월 21일 오세훈시장, 무상급식 전면 반대 주민투표 결과와 시장직간 연계 “투표율이 33.3%에 미달하면 시장직을 사퇴하겠다”공식 발표

의 경우 해당 자치단체 유권자의 10% 이상, 기초자치단체장의 경우 15% 이상, 지방의원의 경우 20% 이상 서명을 받는 것입니다. 소환사유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 사례

- 주민소환제도 :

① 2007년 12월 하남시장 및 하남시의회의원 3인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실시

**원인** 하남시장이 광역화장장을 유치하고자 하는 정책에 대해 주민의 동의를 얻지 않고 추진한 것에 대한 반대

**과정** 2006년 10월, 하남시장 전국 최대 규모(32기)의 광역화장장 유치 발표 - 2006년 11월, 주민들 ‘화장장반대대책위원회’ 구성 - 취임 후 1년 이내 소환청구 불가 조항으로 인해, 2007년 7월 1일 소환절차 돌입 - 2007년 9월20일 주민소환투표 실시 공고로 시장 권한 정지<sup>24</sup> - 9월13일 하남시장 등 서명부 표지 청구사유 미기재로 무효확인 소송 제기<sup>24</sup>에 대하여 법원 서명부 무효를 선언 1차 소환운동 실패 - 10월10일 주민

---

24 권한정지:주민소환청구 요건에 따라 투표안이 공공되면 투표결과가 공표될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자동적으로 정지된. 하남시장과 시의원 3인 38일간 직무정지.

소환 투표 2차 청구, 요건완비<sup>25</sup> - 12월12일 우리나라 첫 주민 소환 투표 실시

**투표 결과**) 하남시장과 시의회의장은 주민소환투표자수가 주민 소환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에 미달하여 개표 실시 못함, 시 의회의원 2명은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되어 개표하였고, 과반 수의 찬성으로 소환이 확정.

**정책수용여부**) 2008년 4월 28일 경기도 1군 1화장장 건립으로 정책 전환, 광역화장장 건립 백지화

② 2011년 과천시장 주민소환투표 청구

**원인**) 2009년 과천시 갈현동 일대 135만3000m<sup>2</sup>(약 40만 9000평)에 아파트 9600채를 짓는 사업 시민 의사 묻지않고 보금자리 지구 수용과정) 7.22~9.7 시장소환 서명운동 1만 2143명 서명명 달성(유권자15%인 8207명 서명하면 주민소환 찬반투표 실시 결정

**결과**) 11.16일 투표권자 55,096명 중 9,802명 투표, 최종 투표율 17.8%로 주민소환법상의 33.3% 이상 투표하여 과반수 찬성으로 소환이 확정되기 때문에 투표율 미달돼 시장직 유지 결정

---

25 주민소환 투표 요건:하남시 투표권자 106,476명(가선거구 55,798명, 나선거구 50,678명), 1차 소환 추진시 하남시장 32,749명, 김병대 12,398명, 임문택18,956명, 유신목19,046명 서명 받았고, 2차 추진시 하남시장 27,158명, 김병대 11,812명, 임문택15,415명, 유신목15,485명 서명.

## 실천하기

법으로 보장된 이 세 가지 주민참여제도는 주민들에게 많은 결정권한을 부여하지만, 그런 만큼 청구요건을 충족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서명 수도 그렇지만, 이 서명에는 서명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실제 주소를 적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서명 명부는 선관위에서 이름과 주소 그리고 주민등록번호를 일일이 대조해 청구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주민참여제도는 잘 활용되지 못하는 편입니다. 특히, 주민들이 청구한 주민투표제는 사문화된 제도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지금까지 활용된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이는 주민소환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소환제는 어렵게 청구요건을 충족해도 결국 주민투표를 통해 소환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주민투표의 경우, 투표율이 전체 유권자의 1/3을 넘지 못하면 개표도 없이 청구 내용이 기각됩니다. 평일에 치러지는 주민투표에 33.3% 이상의 투표율을 기대하는 것은 이 제도의 활용도가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민들이 자신들의 생활문제와 관련해 조례를 제·개정, 폐지하고자 할 때나 특정한 정책을 주민들이 수립하거나 결정하고자 할 때, 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들을 그 직에서 해임하고자 할 때는 여러 주민들이 함께 뜻을 모으고 관련 절차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조직된 시민운동단체 등의 도움을 받는 것이 여러 가지로 유용합니다.

## 6) 청소년의회

### 알아보기

청소년의회는 청소년 사회참여 프로그램 중 하나로, 자치단체 교육 및 청소년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당사자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기구입니다. 각 자치구마다 차이는 있지만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청소년기본법을 통해 보장된 청소년 참여 권리 보장을 목적으로 합니다. 청소년의회가 처음 시작된 것은 2003년 전국사회교사 모임, 정의교육시민연합, 유니세프한국위원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흥사단교육운동본부 등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대한민국청소년의회”를 운영하며 시작되었습니다. 온라인선거를 통해 전국에서 100명의 청소년의원을 선출하고 임시회의와 본회의 그리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청소년의회는 교육기본법 개정, 만18세 선거권 인하운동, 학생인권법제정운동 등 교육청소년관련 입법청원 및 캠페인 등을 통해 청소년 목소리 내기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2012년 성북구 어린이 청소년의회를 시작으로 자치단체 안에서 청소년의회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으며 최근 청소년의회는 서울혁신교육지구 사업 중 청소년자치 영역의 프로그램으로 추진되는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서대문구, 동작구, 금천구, 관악구, 광진구, 성북구 등에서 청소년의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일일 모의의회 경험에서 정기적인 활동 공간으

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 실천하기

각 자치구마다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하기 때문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청소년의회는 하루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4개월 이상 활동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고려해야 합니다. 서울 지역에 개설된 청소년의회는 다음과 같습니다.

## 3. 감시하다

### 1) 행·의정감시

#### 알아보기

행·의정감시활동은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 및 국회의원이 선거 공약에 충실한지, 시민권익에 얼마나 힘쓰는 지 시민들이 직접 감시·감독하는 활동입니다. 이러한 활동은 다음 선거에서 후보 평가의 기준이 되며, 1990년대 초 몇몇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선거 공약 실행 감시 뿐 아니라 국회 임시회·정기회 및 국정감사 모니터링, 의원 법안 발의 모니터링, 정당 모니터링, 정책 및 예산 감시활동 등 세분화된 활동들이 온·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제도가 강화되면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에 대한 행·의정감시 활동 등 풀뿌리 주민참여도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감시 활동은 유권자가 선출한 자치단체장 및 의원들이 유권자의 뜻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감시하는 유권자 권리행사로서의 의미가 있

습니다. 더불어 이러한 활동으로 시민들은 행정과 의회 역할의 중요성과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 실천하기

**열려라 국회!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해 꾸준히 감시하는 활동을 펼치고,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 재산내역, 후원금, 의안발의 및 출석 현황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sup>26</sup>

**의정감시단 참여:** 많은 지역의 풀뿌리 단체들이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 감시를 위한 의정감시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 의정활동 감시하기:** 자신이 사는 지역의 지방의회 방청, 지방의회 홈페이지를 통한 회의중계 시청, 회의록과 같은 기록·자료 열람 등을 통해 의정활동 감시하기.

**행정 감시하기:** 많은 지역 시민운동단체들이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활동은 지방의원들과 협력할 때 효과가 좋습니다.

---

26 <http://watch.peoplepower21.org>

## 2) 환경감시

### 알아보기

환경감시는 환경에 대한 인간 활동에 대한 여러 가지 형태의 잠재적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환경 요인을 조사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1990년대 들어 시민사회의 환경운동이 활성화 되면서, 물, 토양, 공기, 생활환경의 오염실태를 시민들이 나서서 감시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를 지키기 위한 활동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과거 기적의 물질로 알려지면서 석면을 건축자재로 사용한 건물들이 많은데, 최근에는 이 건물들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는 많아지면서 석면과 관련한 환경감시 활동이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석면은 질기고 보온, 보습, 흡음 기능까지 있어 다양한 건축자재로 쓰였습니다. 그런데 미량이라도 인체에 유입되면 악성종괴종이라는 치명적인 병을 일으킨다는 게 확인돼 사용이 금지됐습니다. 그러나 금지 이전에 석면 자재를 쓴 건축물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러한 석면은 오래된 건축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시공사가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석면 가루가 공기중에 날리면서 반경 2km까지 날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2016년 과천주공 1단지 재건축 석면관리 주민감시단 활동을 통해 석면감시 활동 교육을 수료한 후, 현장에서 석면시료 채취, 건축물 철거과정 모니터링 등의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 실천하기: 사례들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sup>BANKO</sup>: 2008년 7월3일 출범. 민주노총, 한국노총, 전국석면피해자와가족협회, 의료연대회의 등 21개 전문기관, 환경단체 등이 참여 결성. 석면감시활동 및 정부 석면정책 모니터링

서울시, 시민자율환경감시단 : 각 자치구에서 2명씩 추천받아 약 50명으로 구성합니다. 환경오염물질배출업소 적정관리 상태 점검, 맨홀·빗물받이 등 공공환경시설 파손·악취발생 여부 확인, 분뇨수집운반차량 청결상태 점검, 하천오염물질 무단방류 감시,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 등 임무를 수행합니다. 이들은 또 중랑천·홍제천·안양천·탄천 총 4개 지천별 환경감시망을 구축해 서울시 전역 환경오염을 감시합니다.

생활환경 감시활동: 환경연합 팩트체크는 생활 제품들의 유해 물질 성분조사 및 공개되지 않은 전성분을 공개할 것을 기업에 요구하는 등 감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시민들이 제품의 성분 및 안전성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페이스북과 블로그로 공개됩니다.<sup>27</sup>

---

27 페이스북 facebook.com/kfem.factcheck; 블로그 http://kfem-factcheck.tistory.com

### 3) 미디어감시

#### 알아보기

1980년 내 이후 텔레비전이 대량 보급되면서 미디어는 우리의 삶 가까이로 다가왔습니다. 이후 영화와 비디오, 컴퓨터, 그리고 인터넷과 모바일 기기 등이 보급되면서 우리의 삶은 미디어와 분리해서 생각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우리의 생각과 행동은 미디어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됐습니다. 미디어의 영향에는 긍정적인 것도 많지만, 부정적인 것들도 많습니다. 미디어의 소비자라 할 수 있는 수용자의 정체성을 띤 시민들이 시민들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미디어 콘텐츠를 감시하는 활동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통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미디어 콘텐츠를 찾아내고, 해당 제작자나 미디어 관련 사항을 규제하는 정부에 개선을 요구하는 한편, 건전한 미디어의 확산을 위한 활동을 펼칩니다.

#### 실천하기

감시활동은 다양한 관점에서 이루어지는데, 주로 청소년 유해 콘텐츠, 성차별 및 성폭력 콘텐츠, 정치·사회적 이슈에 대한 왜곡된 보도에 대한 감시활동 등이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미디어 감시 활동을 펼치는 시민사회단체들을 통해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감시운동본부 [www.womenlink.or.kr](http://www.womenlink.or.kr)

민주언론시민연합 [www.ccdm.or.kr](http://www.ccdm.or.kr)

서울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

여성가족부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매체비평 우리 스스로(매비우스) <http://mabius.tistory.com>

## 1. 민주주의 서울 소개 (알아보기)

<민주주의 서울>은 시민과 서울시가 함께 정책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함께 실행하는 민주주의 플랫폼입니다. 시민들이 민주주의 서울 안에서 일상에서 느낀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할 수 있는 의견을 제안합니다. 시민들은 제안하는 것 이외에도, 다른 시민들의 제안을 읽고 공감을 해주거나 제안에 대한 의견을 통해 토론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시민이 올린 제안에 대해서 30일 동안 50명 이상 공감을 받으면 부서가 검토하고, 500명 이상 공감을 받으면 부서가 검토 후 공론 의제 선정 여부를 심의합니다. 최종 공론의제로 선정된 의제만 온라인 공론장이 열립니다. 온라인 공론장에서 참여 인원이 5,000명 이상이 넘으면 시장이 답변합니다. (※ 제안에서 5,000명의 공감에 대해서는 시장이 답변하지 않으니 유의 바랍니다.) 또한 민주주의 서울 내 <서울시가 묻습니다>에서는 서울시가 정책 수립 전·후 시민들의 생각을 듣습니다. 시민들은 찬성과 반대, 혹은 기타로 정책에 대한 의사를 표하고, 추가적인 의견도 듣습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더 발전된 정책을 통해 더 나은 서울을 만들어갑니다.

## 2. 참여하는 방법 (실천하기)

민주주의 서울(<http://democracy.seoul.go.kr>)사이트에 접속

하여 간단한 로그인 과정을 통해 누구나 언제든지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시민들의 제안에 공감할 수 있고 댓글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사이트 상에 진행되는 시민토론과 서울시가 묻습니다에도 찬성, 반대, 기타 의견 등 자신의 의견을 남길 수 있습니다.

### 3. 참여 사례 (사례)

#### 1) 시민제안 사례1 (육아담당 조부모 동아리 지원)

(1) 사례 내용 요약: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육아를 담당하는 조부모의 수 증가. 육아담당 조부모들을 위한 공간 및 지원 필요에 따른 지원사업 제안. (상세 내용: <http://bit.ly/시민제안사례>)

(2) 부서 답변: 선생님께서 제안해주신 <육아담당 조부모 동아리 지원>에 대한 내용 잘 읽어 보았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좋은 제안이라 생각됩니다. 서울시에서는 100세 시대를 위기가 아닌 축복의 삶이 되도록 어르신들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자치구별 1개소 이상 노인여가복지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며, 어르신 상담센터 운영, 일자리 및 어르신 자조모임 활성화 등 다양한 정책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노인복지관 기능개편 및 시설 확충 시 정책에 반영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노인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 소중한 의견을 주신 김진아 선생님께 감사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평

안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서울특별시 인생이모작지원과)

## 2) 시민제안 사례2 (아외놀이터 그늘막 설치)

**(1) 사례 내용 요약:** 단지 내, 공원 등 어린이 야외 놀이터에 여름철 더위를 피할 그늘막 설치 제안. (상세 내용: [http://bit.ly/시민제안사례\\_2](http://bit.ly/시민제안사례_2))

**(2) 부서 답변:** 뜨거운 여름철 공동주택 단지 놀이터와 공원 놀이터의 아이들의 놀이공간에 자외선 차단과 그늘을 제공하는 그늘막 설치를 제안하셨습니다. 공원 내 놀이터는 보통 휴게공간과 녹지공간 같은 정적인 공간에 퍼걸러와 그늘목 등으로 그늘을 제공하고 있으나 활동량이 많은 놀이공간에는 아이들의 이동이 잦고 공간과 놀이기구 형태와 구조가 다양하여 고정식 그늘시설을 설치하기에 제약이 있습니다. 다만, 놀이공간에 주변 지지대를 이용하여 임시 그늘막을 설치하는 사례가 있으니 한여름 아이의 놀이 활동 편의를 위해 임시 그늘막 같은 시설로 그늘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공원 놀이터를 관리하도록 권장하겠음을 알려드립니다. 추가로 공동주택단지 내 놀이터는 관리주체가 민간으로 단지 내 주민이 공감대를 형성하여 스스로 결정하여 설치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공원녹지정책과)



# 결론



## 강의전달식 교육이 아니라 모두가 일상에서 참여하는 민주시민 “학습”으로

더 나은 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적정한 민주적 제도와 절차 확립과 이를 운용하는 시민의 역량입니다. 이러한 큰 틀에서 이제는 1천만 서울시민의 다양한 생각과 관점을 존중하고 포용하는 ‘민주시민학습’이 필요합니다. 민주시민 강사와 교수에게 교실에 앉아서 배우는 전통적 교육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이웃과 다양한 현안을 돌아보고, 민주적 절차에 대한 비판적 사고 능력을 가지고, 서울시의 공공의 이익을 함께 추구하고, 필요에 따라 문제를 제기하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민주사회를 이끌어가는 정책과 제도 변화의 목소리를 동료 시민들과 내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서로 배우고 상호 작용하는 것이 곧 민주시민학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서울이라는 거대한 사회공동체에서 민주성 키워가기

그렇다면 매일매일을 바쁘게 살아가는 서울 시민들이 일상에서 민주시민학습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요?

과거와 같이 특정 시민단체나 참여하고 회원이 되어야만 민주시민으로서 사회 참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민주시민’이라는 간판을 건 단체에 소속되지 않더라도, 거리에서 그리고 인터넷 공간에서 내 지역, 나와 연관된 삶터, 가깝고도 먼 이웃, 지역사회 속으로 일상 생활 속으로 자연스럽게 녹아들어가는 민주시민 ‘학습’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어렵거나 딱딱한 시민학습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은 ‘알쓸신잡’처럼 유익하고 흥미로운 것을 배우고 깨우쳐가면서 공존하는 삶을 고민할 수 있습니다.

내 주변을 돌아볼 여유가 없이 각박한 사회를 살아가고, 타인들과 상처받는 말을 주고받으면서 상처를 받고 있지 않나요? 뉴스에서 넘쳐나는 각종 사건 사고들로 인해서 정치적 무관심이 커질 만큼 실망스럽지 않나요?

## 상생과 공존의 연대, 그리고 사회적 신뢰를 키우는 민주시민 학습

모두가 평안하고 정신적, 문화적 번영을 누릴 수 있는 서울시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사회공동체의 민주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서울에서 안정감을 느끼고, 사회적 신뢰감을 키워가고, 문화적 다양성과 개인의 개성을 존중하고, 서울이라는 공간에서 함께 살아가는 다양한 사람들과 상생하며 연대하는 공유된 시민적 정체성<sup>shared civic identity</sup>을 키워가는 것이 바로 민주시민학습의 실천적 걸음입니다.



# 부록

## 민주주의를 촉진하는 기술

(민주적 의사소통 기법)

생활 속 민주주의에는 경청, 공감, 대화, 토론, 논쟁, 의사결정, 참여, 공유, 협력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이 요소들은 모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존재하는 것들인데, 이런 요소들을 민주주의 촉진 기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들의 원천은 변하지 않으나 이 기술들을 사용하는 방법은 시대에 따라 조금씩 달라집니다.

이 장에서는 ‘마음열기, 자기이해, 공감 - 아이디어, 상상, 발표 - 대화, 소통, 합의, 결정, 문제해결, 갈등해소 - 교류, 참여, 공유 - 회고, 성찰’로 이어지는 흐름으로 민주주의를 촉진하는 기술들을 몇 가지 소개하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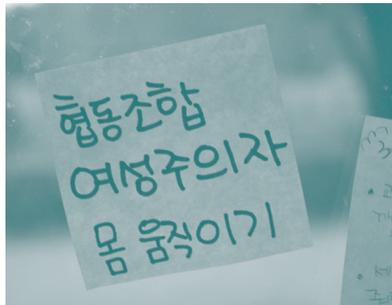
# 마음열기, 자기이해, 공감

## 쓰리 키워드

### 세 가지 키워드로 자기 소개하기

모든 첫 만남에는 자기소개가 있습니다. 명함을 주고받으며 어디서 일하는 누구라고 소개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직업과 이름만으로는 상대방을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는 명함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도 많고,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는 직장이나 직업, 이름 뒤에 있기 때문입니다.

쓰리 키워드<sup>3</sup> keywords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줄 수 있는 세 가지 키워드를 통해 서로를 잘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간단한 자기소개 방법입니다. 세 가지 키워드에는 하는 일이나 애칭 외에도 성격이나 취미, 특기, 취향 등을 자유롭게 적을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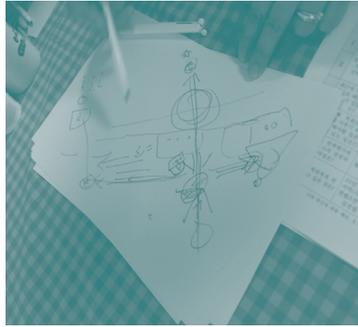


있는데, 이는 짧은 시간 안에 나를 소개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 픽서너리

### 오직 그림만으로 소통하기

바나나, 코끼리, 주전자 등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것은 모두 비슷한 모습으로 인식하지만, 소통, 협력, 성과, 열정과 같은 추상적 단어는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없기 때문에 각자가 다르게



인식합니다. 단어에 대한 정의는 똑같지만 이 단어에 대한 인식은 각자의 축적된 경험과 정보에 근거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소통을 잘 합시다’라고 공통된 결론을 냈음에도 각자가 생각하는 소통의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각자 다른 결론을 생각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픽서너리 [pictionary](#)는 사회자가 제시한 단어들—주로 위에서 언급한 추상적인 단어—을 그림으로만 표현해서 맞추게 하는 게임입니다. 팀별로 누가 빨리 정답을 맞히는지 경쟁하는 게임이지만, 똑같은 단어를 각자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알게 해주는 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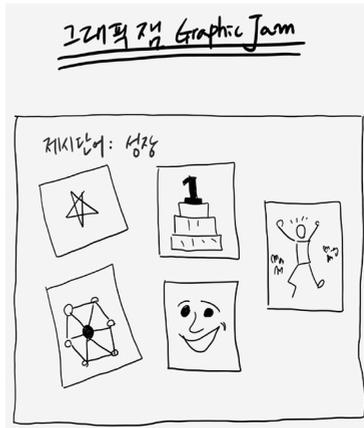
의미가 있습니다.

픽셔너리는 참가자 모두가 한 번씩은 직접 그림으로 단어를 설명하는 미션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정답을 맞히는 시간이 너무 지체될 경우, 사회자가 정답을 말해 주고 그림을 그리는 사람에게 해당 단어를 어떻게 표현하려고 했는지 이야기하게 합니다. 정답을 맞히는 것보다 하나의 단어를 각자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꼭 그림을 공유하고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합니다.

## 그래픽 잼

### 시각화 작업으로 단어에 대한 공감대 만들기

픽셔너리가 추상적인 단어를 시각화하면서 팀끼리 경쟁하는 게임이라면, 그래픽 잼 **Graphic Jam**은 해석과 인식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추상적인 단어들을 개별적으로 시각화하는 작업을 하면서 생각의 차이를 인식하고 공감대를 만들어가는 방법입니다. 특히 같은 조직 내에서 자주 쓰고 있지만 서로 그 단어에 대해서 구성원



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확인해보고자 할 때 그래픽 잼은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 ‘리더십’이나 ‘성과’, ‘협력’과 같은 단어가 이에 해당합니다.

## 6X6 주사위 게임

### 서로를 알아가는 36가지 질문

6×6 주사위 게임은 가로, 세로로 6칸씩 나뉜 종이에 총 36가지의 질문을 적어놓고, 2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나오는 질문에 답하면서 서로를 알아가는 프로그램입니다. 보통 자기 소개를 하거

주사위 1 2	주사위 1 →	주사위 2 ↓	주사위 3 →	주사위 4 ↓	주사위 5 →	주사위 6 ↓
	내가 알려줄 수 있는 (소소한) 노하우	심심하고 무료할 때 무엇을 하나요?	인생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존경하는 사람은? (롤모델) 그 이유는?	당장 여행하고 싶은 곳? 이유는?	인제 행복한가요?
	여행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지금 생각하는 사람? 이유는?	지난 일주일간 내가 한 착한 일은?	자유질문 1개 받기	돈, 시간을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면 하고 싶은 일은?	인생이 3년 남았다면 어떻게 살고 싶나요?
	배우고 싶은 것은?	당신이 자발적으로 하는 활동은? (시간과 돈, 열정을 쏟으면서)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가요?	아직 시도하지 않았지만 이루고 싶은 꿈은?	슬럼프를 극복하는 당신의 방법은?	요즘 오펜시간 고민하는 것은?
	당신의 청소년 시절을 들려주세요	살면서 가장 만족을 느낀 경험은 무엇인가요?	자기 자랑 3가지 (거만하게)	광산구에서 사는 것이 즐거운 이유	지금 하는 일을 시작하게 된 이유?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경험은? 어떻게 극복?
	다음 생에 이성으로 태어난다면?	하는 일의 어떤 점에서 만족감을 느끼나?	내가 나이 들었다고 느낄 때?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아는대로~	당신의 추천리스트 (영화, 드라마, 책, 연극, 맛집...)	나에게 주인은 _____이다
가장 자신있는 외모는?	구청장, 시장이 된다면?	무인도에 가져갈 3가지는?	건강한 지구를 위해 당신이 실천하는 것은?	당신이 자주 칭찬받는 이유는?	당신에게 힘을 주는 말은?	

나 회의를 할 때 돌아가면서 순서대로 이야기하는 방식을 많이 이용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 사람들은 상대의 이야기에 집중하지 않고 내 순서가 돌아오면 어떤 이야기를 할까를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6×6 주사위 게임은 자기에겐 어떤 질문이 제시될지 모르기 때문에 상대방의 이야기에 집중하게 되고, 다양한 질문이 있어서 짧은 시간에 재미있게 서로를 알아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36가지 질문과 미션은 모임의 특성에 맞게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는데, 미리 준비를 못했으면 즉석에서 A3나 2절지에 가로 세로 6칸씩을 그리고 각자에게 서로 묻고 싶은 질문을 포스트잇에 쓰게 한 후 진행해도 됩니다.

# 아이디어, 상상, 발표

## 브레인스토밍

### 가장 널리 알려진 아이디어 발상법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은 아이디어를 생각해 내는 기법으로는 가장 많이 알려진 방법인데, 어떤 주제와 관련된 아이디어라면 생각나는 대로 자유롭게 제한 없이 이야기함으로써 창의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사진출처: 플리커CCL @theimagegroup

브레인스토밍에는 몇 가지 규칙이 있는데 다른 사람의 발언을 평가하거나 비판하지 않고, 자유롭게 격식에 얽매이지 않는 생각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질보다는 양을 중요시하고, 다른 사람들의 아이디어에 무임승차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참고 및 인용

- 새로운 민주시민교육 방법 (송창석 지음, 백산서당)
- 네이버 백과사전: <http://100.naver.com/100.nhn?docid=80518>
- 브레인스토밍의 절차와 과정: <http://bit.ly/brainstorming01>
- 위키피디아: <http://en.wikipedia.org/wiki/Brainstorming>

## 이그나이트

### 5분 동안 핵심을 이야기하는 발표 이벤트

이그나이트 Ignite는 5분 동안 20장의 슬라이드를 넘기면서 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방식의 발표 이벤트입니다. 한 장의 슬라이드는 15초 동안 보여지며 슬라이드는 자동으로 넘겨지게 합니다. 첫 번째



이미지출처 : <http://lovesera.tistory.com/757>

이그나이트가 2006년 워싱턴 시애틀에서 열린 이래로 이 행사는 전 세계적인 유행이 되었습니다.

이그나이트의 미션은 ‘모든 사람이 말하게 한다’인데, 누구든지 어디서나 자신의 생각과 스토리를 알리는 법을 익힐 수 있게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그나이트 형식은 페차쿠차<sup>Pecha Kucha</sup>와 비슷한데 페차쿠차는 20장의 슬라이드를 20초 단위로 넘긴다는 점

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참고 및 인용

- 정진호님의 블로그: <http://lovesera.com/tt/598>
- 이그나이트 서울 홈페이지: <http://igniteseoul.org/blog>
- 이그나이트 홈페이지: <http://igniteshow.com>

## 소셜 픽션

### 상상력이 세상을 변화시킨다

“공상과학소설이 결국 과학을 움직였다. 먼저 상상해야 변화가 일어난다. 그렇다면 사회를 변화시키려면 소셜 픽션 *social fiction* 을 써야 하는 것 아닌가?” 이 말



[2013년 11월, 어린이대공원의 미래를 주제로 열린 소셜 픽션 컨퍼런스]

은 노벨평화상 수상자이자 소액대출은행인 그라민은행의 설립자인 무하마드 유누스가 한 말입니다.

소셜 픽션은 여기에서 나온 말로, 이 프로그램은 공상과학 소설처럼 먼 미래의 사회를 상상해보는 프로그램입니다. 소셜 픽션은 공상과학 소설을 쓰듯이 사회적 상상을 하는 것이고, 그 상상

의 사회로 가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함께 생각해보는 작업이기도 합니다. 소셜 픽션은 하나의 워크숍 방법론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사회적 상상을 하자’는 제안이기도 합니다.

앞으로의 일을 계획할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내가 가진 자원과 한계 안에서 계획하는 것, 다른 하나는 내 자원과 한계는 생각하지 않고 계획하는(상상에 가까운) 방법입니다. 소셜 픽션은 후자의 방법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소셜 픽션에서 중요한 관점과 태도는 ‘과감하게 상상하는 것’입니다. 현실적 제약조건을 넘어선 사회적 상상은 ‘비현실적’이거나 ‘모호하다’는 비판에 직면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변화는 늘 상상에서 시작됩니다. 궁극적으로 어떤 사회를 만들 것인지, 어떤 사회에서 살아갈 것인지 상상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갖는 것, 그것이 변화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 대화, 소통, 합의, 결정, 문제해결, 갈등해소

## 월드카페

### 모두가 이야기하게 하는 카페식 대화법

사람들이 가장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왜 회의실에서는 대다수가 침묵할까요? 이런 의문점으로부터 출발해 사람들 간의 친밀한 대화를 촉진하고 참가가 모두가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설계한 대화 방법이 월드카페입니다. 카페식 대화법이라고도 하는 월드카페는 공통된 질문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참가자들은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테이블을 옮겨 다니면서 대화를 나눕니다.

월드카페는 1995년 주아니타 브라운 [Juanita Brown](#)과 데이비드 이삭 [David Isaacs](#)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월드카페의 참가자들은 네다섯 명의 작은 그룹으로 테이블에 둘러앉아 정해진 시간 동안 질문에 대해 대화를 나눕니다. 테이블에 놓여진 커다란 전지 위에 메모를 하거나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이 되면 테이블 호스트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른 테이블로 옮겨져서 같은 질문을



이미지 출처: 월드카페 홈페이지 <http://www.theworldcafe.com>

놓고 또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런 방식으로 테이블을 순회하다 보면 어느 순간 모든 참가자들이 서로 만나서 대화를 하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 참고 및 인용

- 위키피디아: [https://en.wikipedia.org/wiki/World\\_caf%C3%A9](https://en.wikipedia.org/wiki/World_caf%C3%A9)
- 애자일 게임 개발 도입하기 월드카페: <http://onoffmix.com/e/istoriae/439>
- 다음 기획자 컨퍼런스, 월드카페: <http://ophilia.tistory.com/2047>
- 2010년 시민운동가대회, 월드카페: <http://activistrally.tistory.com/9>
- 집단토론방법, OST와 월드카페: <http://yuzi.egloos.com/1783326>
- 월드카페 홈페이지: <http://www.theworldcafe.com>

## 오픈 스페이스 테크놀러지

### 자기주도형 열린 토론방법

오픈 스페이스 테크놀러지 **Open Space Technology**는 커피 브레이크



에서 영감을 얻어, 격식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훌륭한 회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창안한 독창적인 집단토론방법입니다. 1985년 해리슨 오웬(Harrison Owen)이 85명의 조직 분야 전문가들과 이 회의 기술을 실험한 후, 이 방법은 수많은 퍼실리테이터와 컨설턴트들에 의해 전 세계로 확산되었습니다.

#### 참고 및 인용

- 위키피디아: [https://en.wikipedia.org/wiki/Open\\_Space\\_Technology](https://en.wikipedia.org/wiki/Open_Space_Technology)
- 오픈스페이스코리아: <http://openspace.kr/oskorea>

## 21세기 타운홀미팅

### 주민참여를 통한 정책의제 선정

21세기 타운홀미팅은 주민들이 직접적인 토론과 숙의의 과정을 거쳐 핵심 의제를 결정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America Speaks라는 비영리단체에서 1995년부터 주민참여를 통



[코리아스피스가 개최한 대구시민원탁회의의 진행 모습]  
이미지 출처 : 코리아스피스 홈페이지

한 정책결정을 실현하기 위해 개발하고 발전시켜왔습니다. 기존의 타운미팅과 달리 ‘대규모 의제 선정을 위해 직접민주주의 방식과 IT를 활용한 솔루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래 타운미팅은 사회적 의제와 관계된 이해당사자와 전문가, 활동가, 정치인, 일반 시민들이 모여서 토론하고 투표를 통해 정책을 만들어가는 참여형 의사결정과정으로, 미국에서 오래전부터 시행되어 왔습니다. 이 방식은 오래 전 마을공동체 의사결정방식인 타운홀미팅에 기원을 두고 있는데, 마을 사람들이 큰 홀에 모여 토론하면서 마을의 규범들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뉴햄프셔주의 런던데리라는 소도시에서는 별도의 대의기관을 두지 않고 주요 의사결정을 타운미팅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1995년 캐롤라인 루켄스마이어 박사는 타운미팅 방식을 사회적 의제의 의사결정과정에 적용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America

Speaks라는 비영리단체를 설립하고 IT기술을 접목시켜서 ‘21세기 타운홀미팅’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방식의 대중적 토론을 조직화한 것입니다.

America Speaks는 ‘21세기 타운홀미팅’을 통해 ▲워싱턴 D.C 시민참여예산 책정 ▲오하이오 북동부 지역 재생사업 ▲뉴욕 그라운드제로 재건축 ▲뉴올리온즈 허리케인 카트리나 재해복구 ▲캘리포니아 의료보험 개혁 등 미국의 굵직굵직한 사회적 의제 해결에 기여했으며, 2011년 현재 연인원 16만 명의 시민들에게 정책 결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 참고 및 인용

- 위키피디아: [https://en.wikipedia.org/wiki/Town\\_hall\\_meeting](https://en.wikipedia.org/wiki/Town_hall_meeting)
- 코리아스피크스: <http://koreaspeaks.or.kr>

## 시민의회

### 추첨으로 선정된 시민들이 국가의 주요 정책을 결정한다

시민의회는 추첨제로 선정된 시민들이 국가적으로 중요한 이슈에 대해 숙의과정을 거쳐 정책 제안하는 것을 말합니다. 시민의회는 시민들이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 주인의식을 가지고 참여함으로써 정치 과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캐나다와 네덜란드의 경우처럼 보통 시민의회는 국가가 제안하는

데, 이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토론이나 다양한 조사방법들을 사용하여 특정 문제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시민의회는 국가가 제안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아일랜드와 벨기에의 경우처럼 아래로부터 시민의회를 요구하는 예도 있습니다.

#### 참고 및 인용

• 위키피디아 Citizens' assembly, Citizens' Assembly on Electoral Reform(British Columbia)

### 시민의회의 특징

**구성원의 추천제 선출:** 시민의회 구성원은 사회의 다양한 계층을 반영하는 추천제로 선정합니다. 선거가 일반 시민보다 더 탁월한 사람들<sup>Elite</sup>을 선출하는 방법이어서 사회의 다양한 계층을 반영하기보다는 소수의 집단체제를 구성하는 특징을 가지는 것과 달리, 추천은 일반 시민과 유사한 사람들로 사회 계층마다 각각의 공동체를 대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고대 아테네 민주주의에서 실현되었던 추천제는 평등성, 비용 절약, 대의성 측면에서 선거의 대안으로 다른 유럽에서도 실행되었습니다. 종종 비판받는 것처럼, 시민의회가 최고의 성과를 내거나 가장 능력 있는 집단은 아닐지라도, 다양한 집단이 단일한 집단보다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연구 결과가 말해주듯이, 추천제를 통한 집단 내의 다양성은 효과적인 문제해결에 독특한 관점과 해석으로 도움을 줍니다.

**임기:** 구성원의 임기에 제한을 두어 교체를 하는 이유는 장기적으로 다양성을 유지하고 엘리트 계급의 독점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임기가 제한되어 있지 않으면 시민의회가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규모:** 정해진 규모는 없고, 목적·인구분포·커뮤니티 인구수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대표성을 떨 수 있게 신중하게 정해져야 합니다.

**기능:** 역사적으로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목적으로 시도되었지만, 시민의회는 어떤 제한도 없이 정부와 관련된 모든 것을 목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정책 결정보다는 정책 제안을 위해 시민의회가 도입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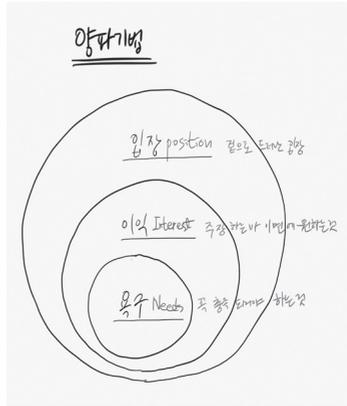
**숙의과정:** 구성원은 정치인이나 분석가, 과학자 등 전문가들로부터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관점, 정보, 주장들을 통합하고 집단 토론에 참가함으로써, 시민의회에 선출된 사람들이 대중들의 이해를 잘 대표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양파기법

### 갈등을 분석하는 방법

양파기법이란 갈등 상황에서 당사자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게 도와주는 방법입니다. 양파 껍질이 겹겹이 쌓여 있

어서 한 껍질을 벗겨내도 또 다른 껍질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양파기법은 표면적으로 드러난 갈등의 입장 속에 실제로 존재하는 실익과 요구를 이해하게 해줍니다. 갈등 상황을 다양한 측면에서 이해하고 싶을 때나 갈등 당사자들의 대화를 촉진하기 위한 준비과정에 사용합니다.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양파의 겉부분 껍데기에 있는 ‘입장’은 어떤 문제에 대해 당사자가 공식적으로 취하고 있는 입장 혹은 해결책입니다. 그 안에 있는 ‘실익’은 목표나 이익 등 당사자가 실제로 갖기를 원하는 것, 혹은 그 이면에 있는 피하고 싶은 것이나 두려워하는 것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안쪽에 있는 ‘욕구’는 개인 혹은 집단으로서의 당사자가 실익의 본질적인 것으로 반드시 충족되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참고 및 인용

- 갈등다루기 양파기법: 전쟁없는 세상 <http://www.withoutwar.org/?p=12172>
- 청소년갈등해결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연구:  
<http://lib.nypi.re.kr/pdfs/2005/05R0712/1.pdf>

## 해커톤

## 문제해결을 위한 마라톤 개발

‘해커톤’은 ‘hack(‘만들다, 파고들다’라는 뜻)’과 ‘marathon(장시간의 달리기)’의 합성어로, 혁신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기술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조직한 행사를 말합니다.



2011년 HackNY이 개최한 해커톤  
(이미지 출처: hackNY.org)

해커톤은 보통 하루에서 일주일까지 지속됩니다. 최근 몇 년간 해커톤은 충혈된 눈과 에너지 드링크, 피자, 소프트웨어 개발로 상징되는 전형적인 컴퓨터 프로그래밍 행사부터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아이디어를 모으는 수단으로까지 진화해왔습니다. 해커톤은 혼자 일할 때보다 함께 작업할 때 더 많은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자, 프로그래머, 사회적 기업가, 디지털 매니아들의 전문적인 지식을 서로 엮어내는 행사입니다.

해커톤은 정부 시스템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도 열립니다. 2011년에는 미국 의회가 주최한 해커톤이 있었으며, 2014년에는 영국 정부가 치매에 걸린 사람들과 그들 간병인들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영국과 캐나다에서 동시에 해커톤을

열기도 했습니다. 또한 2015년 10월에 미국의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해킹에듀(HackingEDU)의 해커톤은 6,000명이 넘는 사람이 참가신청한 최대 규모의 교육 해커톤이었습니다. 행사는 ‘다음 세대의 학생들이 우리 교육 시스템에 만연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게 영감을 불어넣어 주는 것’을 사명으로 하는 비영리조직에서 운영했습니다.

다양한 해커톤이 도시의 교통 시스템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도 열렸습니다. 많은 성공적인 해결책들이 나온 런던 의회가 주최한 해커톤과 같이, 도시의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열리는 해커톤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더 나은 교육을 모색하기 위해서 열리는 해커톤도 많으며, 재난 관리나 위기 사항에 대한 대처 등을 주제로 열린 해커톤도 있습니다. 해커톤은 또한 비영리 조직들이 기술이나 웹사이트 운용과 관련해서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열리기도 합니다.

#### 참고 및 인용

- 위키피디아: <https://en.wikipedia.org/wiki/Hackathon>
- 해커톤이란?: <https://goo.gl/9xOsWp>(해커톤 진행방법 참고)
- 해커톤을 위한 6가지 팁: <http://www.techrepublic.com/article/how-to-organize-a-hackathon-6-key-tip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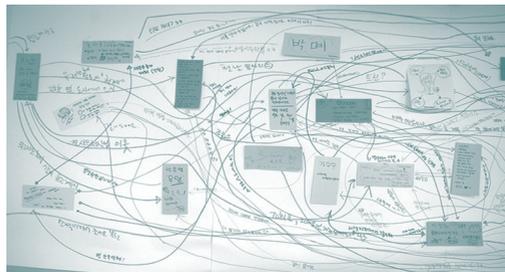
## 교류, 참여, 공유(정보, 지식, 경험)

### 손으로 그리는 소셜 네트워크

손으로 그리는 소셜 네트워크 프로그램은 모임에 참여한 사람들 사이의 인맥을 시각화하여 보여주고, 서로를 소개하는데 유용한 방법입니다.

처음에는 벽에 그려진 관계도가 너무 복잡해서 자세히 보지 않으면 파악하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모든 사람이 관계도를 그리게 되면 전에는 몰랐던 관계를 발견하거나 새로운 친구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참가자들을 개별적으로 아는 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관계를 알게 되어 서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예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참가했을 경우에는 처음에 포스트잇이나 색인카드



만을 붙이게 하고,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 참가자들끼리 맺은 관계들을 표시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다’, ‘같이 밥을 먹었다’, ‘무엇에 관해 궁금한 것을 물어보니 답변을 해줬다’, 이렇게 하면서 프로그램 시간 동안 가장 많은 관계선을 만든 사람에게 선물을 줄 수도 있습니다.

## 고민해결 댓글의 벽

### 포스트잇으로 고민을 함께 나눈다

고민해결 댓글의 벽은 ‘모이고 떠들고 꿈꾸다(모.떠.꿈)’ 프로그램을 기획하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입



니다. 고민해결 댓글의 벽은 온라인상에서 누군가의 글이나 사진 등에 댓글을 다는 것처럼, 참가자들 간에 포스트잇으로 서로 의견을 나누는 방법입니다.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이유는 새로운 무엇인가를 배우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일을 하면서 스스로 마음속에 품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그 해결책이 이미 정해진 교육프로그램을 통해서 해소되기도 하지만 우리는 종종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는 사람들, 혹은 이전에 그런 고민을 했던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해결되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경험들을 우리에게 익숙한 댓글달기 방식의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본 것이 고민해결 댓글의 벽입니다.

## 바 캠프

###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진행되는 언컨퍼런스

바 캠프 BarCamp는 참가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하며, 특정한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진행되는 언컨퍼런스입니다.



바 캠프 서울 행사를 스케치한 모습(이미지 출처: joone.net)

초창기에는 주로 웹, 오픈소스 등 IT분야를 중심으로 개최되었고, 국내에서도 바 캠프 서울, 바 캠프 제주 행사 등이 열린 적이 있습니다.

바 캠프는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한 형식 없는 컨퍼런스입니다. 모든 프로그램은 참가자들의 자유로운 발표와 토론, 정보 공유, 인간관계의 증진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때문에 모든 참가자들은 발표 및 토론 참여를 통해 자신을 스스로 참여시키고 적극적

인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합니다.

바 캠프는 열린 공간에서 참가자들끼리 서로 발표하고 배우면서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전통적인 컨퍼런스처럼 발표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처음부터 나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발표를 하고, 원하는 곳에 가서 들을 수 있고, 서로 토론하고 교류할 수 있는 모임입니다. 모든 참가자는 하나의 발표를 하거나 자원 봉사자로 참여해야 합니다.

#### 참고 및 인용

- 바 캠프 공식 홈페이지: <http://barcamp.org>
- 바 캠프는 이렇게 시작되었다. <http://barcamp.tistory.com/2>
- 위키피디아: <http://en.wikipedia.org/wiki/BarCamp>

## 휴먼 라이브러리

### 사람이 책이고 마을이 도서관

휴먼 라이브러리는 덴마크 출신의 사회운동가 로니 에버겔이 2000년 덴마크에서 열린 한 뮤직 페스티벌 [Roskilde Festival](#)에서 창안한 것으로, 유럽에서 시작되어 빠른 속도로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신개념의 ‘이벤트성 도서관’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대화하고 소통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서로 잘 알지 못해 가질 수밖에 없었던 타인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 고정관념을 줄이자는 의도



2011년 제주에서 진행된 사람책 도서관 행사

로 기획된 행사입니다. 행사는 ‘책’으로 자원한 여러 계층의 사람들과 그 ‘책’들과 대화를 통해 그들을 이해하려는 ‘독자’들, 그리고 그 둘 사이를 이어주는 도서관(진행자/주최자)이 참여하여 진행합니다.

휴먼 라이브러리의 도서목록에 등장하는 책들의 주제는 꼭 사회 저명인사거나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들만이 아닙니다.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편견의 대상이 된, 혹은 ‘우리와는 다르다’고 분류된 소수자들뿐만 아니라 자신의 분야와 위치에서 즐겁게 일하고 있는 사람들, 자신의 굴곡진 인생이야기를 들려주고픈 사람 등 그 주제에는 크게 구애받지 않습니다.

## 참고 및 인용

- 관련도서: 나는 런던에서 사람책을 읽는다. (김수정, 달, 2009)
- 살아있는 도서관, 리빙라이브러리 \_ 아르떼진: <http://artezine.blog.me/90106944313>
- 대전에서 열린 리빙라이브러리: <http://pple.net/468>
- 서울숲에서 열린 리빙라이브러리: <http://blog.naver.com/dnk123/20130900334>
- 사람도서관 in 부천 카페: <http://cafe.naver.com/livinglibrarybcf>

## 렛츠

### 우리 마을 지식품앗이 시스템

렛츠<sup>LETS</sup>는 공동체 안에 이미 내가 배우고 싶은 것을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동시에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인식하고, 공유하고, 서로를 연결하는 배움과 지식의 품앗이 시스템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의 렛츠<sup>LETS</sup>는 Local Energy Trading System의 앞 글자를 합친 말인데, 지역화폐운동인 LETS<sup>Local Exchange and Trading System</sup>에서 아이디어를 가져왔습니다.

창작자들을 위한 렛츠 컨퍼런스가 2010년 3월, 국내에서 처음 개최되었습니다. 창작자들을 위한 렛츠 컨퍼런스는 동반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지만 서로가 속해 있는 영역, 분야가 달라서 만나기 힘든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장입니다, 또한 다양한 분야의 창작자들이 함께 만나고, 서로 알아가고, 배움을 교환하면서 전혀 다른 분야의 창작자들과 오히려 새로운 협업의 가능성



2010년 지속가능창작공동체 주최의 창작자를 위한 렛츠 컨퍼런스

을 발견하는 기회를 만들고자 기획되었습니다. ‘창작자를 위한’이라고 했듯이, 여러 가지 분야에서 진행해볼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의 프로그램입니다.

#### 참고 및 인용

- 지속가능한 창작공동체 홈페이지  
: <http://sites.google.com/site/balsangcc/home>

# 회고, 성찰, 마무리

## 3Fs 회고법

3Fs 회고법은 사실<sup>Fact</sup>, 느낌<sup>Feeling</sup>, 교훈<sup>Finding</sup>의 세 가지 형식으로 회고하는 방법입니다. 애자일컨설팅 김창준씨가 제안한 회고법으로, 예를 들어 ‘나는 오늘 무엇무엇을 해봤다. 그래서 어떤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교훈을 얻었다’는 식으로 회고를 합니다.

## PMI 회고법

PMI 회고는 좋았던 점<sup>Plus</sup>, 아쉬웠던 점<sup>Minus</sup>, 인상적이었던 점<sup>Insight</sup>, 세 가지 항목을 중심으로 회고하는 방법입니다. 이 회고는 일반적으로 모든 프로그램이 끝난 후에 마지막 회고의 방법으로 이용하는데, 각 프로그램이 끝날 때마다 진행해도 됩니다.







# 공감하는 서울시민, 함께하는 이웃살이

- 민주주의 학습 안내서

연구진	조철민, 조양호, 권복희, 서미화, 이필구, 이호
편집진	고선규, 김진희, 위정희
펴낸날	2019년 11월 20일
펴낸이	손성조
펴낸곳	서울특별시생활속민주주의학습지원센터 (03180) 서울시 종로구 통일로 162, 덕산빌딩 302호 (02) 747-2020   seoulminjucenter.kr
편집·디자인	포도밭출판사
출판물번호	교육331-0009
발간등록번호	51-6110000-002038-01
ISBN	979-11-6161-661-2 133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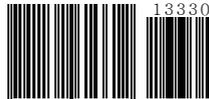
Copyright © 서울특별시생활속민주주의학습지원센터

※ 이 안내서는 서울특별시생활속민주주의학습지원센터의 민주시민교육 연구사업으로  
진행되었으며, 이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센터의 공식적인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이 안내서는 비매품입니다. 자료요청 등은 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감하는  
서울시민,  
함께하는  
이웃살이

비매품 / 무료



13330

9 791161 616612

ISBN 979-11-6161-661-2